

제1차 성인지예산 포럼 [GB포럼]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2008. 8.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인지예산센터

제1차 성인지예산 포럼 [GB포럼]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

2008. 8. 14.

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책임자: 박노욱(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공동연구원: 김 진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성 인 지 예 산 센 터

목 차

I . 서론	1
II 예산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기준	4
III. 심층평가 사례 분석	9
1. 심층사례 개관	9
2. 심층사례 분석	18
IV.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73
1. 사업유형분류	73
2. 자체평가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75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안	112

I. 서론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은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구체적으로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예산 사업 뿐 아니라 중립적으로 보이는 예산 사업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을 양적으로 확장하고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적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인지 예산을 논할 때, 점검되어야 하는 질문은 양성평등적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과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의 예산이 양성평등적 영향을 가져오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양성평등적 사회가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양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양적으로 동일한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지수와 경제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시사적 연구 결과(Stotsky, 2007)는, 양성평등적 예산이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¹⁾. 둘째는 사회 구성원이 불평등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성간의 불평등이 존재할 때, 사회 구성원은 불편해 하며 행복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거에 의하면 정부 예산을 통해 양성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회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사업이 양성평등적 관점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예산 사업이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이다. 한 가지는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경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의 예산지출이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

1)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빈약한 형편이어서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Stotsky(2007)의 연구 결과는 상관관계를 보여 줄 뿐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인지 예산의 연구자들은 외부성을 주요 근거로 정부 개입의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양성평등이 주는 혜택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며, 개인이 그 혜택을 배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적정 수준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일반 예산사업의 의도하지 않게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다만, 일반 예산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리하는 행정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성인지 예산은, 1984년 호주의 양성평등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고,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인지 예산에 관한 행동강령이 채택된 후 확산 되고 있다. 이들 성 인지 예산에 대한 접근은 시민사회의 요구 혹은 정부의 차원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현재는 유엔여성기금(UNIFEM)과 국제개발연구센터(IRDC)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성 인지 예산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에 여성운동단체(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예산운동의 일환으로 성 인지 예산 개념이 공론화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2006년 성 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성 인지 예산 제도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또한 2006년 9월 8일에 국가재정법이 통과되어 동년 10월 4일에 공포 되었는데, 이 법에는 성 인지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 인지 예·결산 보고서 제출은 2010년부터 시행된다. 성 인지에 관한 예·결산 보고서 제출까지 시한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제도의 운영방안 도출이 당면과제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양성평등적 관점을 예산편성, 집행, 평가 및 환류 과정에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의 관점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예산 편성에서 예산사업을 통한 정부 지출의 성과평가 및 환류의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연구하고

자 한다.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방안의 제도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박노옥·원종학(2007)에 이미 다루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의 지침 마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성과관리방안은 모니터링 수준에서의 성과관리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모니터링 목적의 성과관리제도는 소수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사업의 성과에 대해 빠른 시간에 체계적으로 환류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부의 예산 지출 또는 예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산 지출을 통한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예산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이다.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예산 지출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다. 수혜의 양성 평등성은 수혜자와 수혜금액을 고려하게 되고,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고려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예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과지표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사업 수단에 근거해 유형화하고 사업 유형별로 상기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성과지표 개발을 하는 것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의 예시를 활용해서 사업 담당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본 연구의 목적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II장에서는 예산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논한다. III장에서는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심층평가 사례를 활용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 사업 평가 기준의 적용 사례와 적절성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예산 사업을 사업 수단별로 유형화하고, 각 사업 유형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를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 자체평가 사례를 예시로 활용한다.

II. 예산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기준

성별영향평가는 07년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건으로서,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정책의 입안 및 결정단계, 정책 집행단계, 정책의 영향 평가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라는 정신에 근거하여, 입안, 결정과정 등의 양성평등성 보다는 사업 수혜와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정책이라는 용어 대신 예산 사업이라는 용어를 대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 분석이 연구의 주제이므로, 초점을 예산사업에 두고자 한다.

예산 사업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논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정책 수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과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정책 수혜자의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지, 예산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는 않은지,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한지에 대해 점검하게 되어 있다.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은 정책의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점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지표는 예산 사업 수혜자의 양성평등성과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예산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큰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보다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검토해 보자.

사업 수혜의 양성평등성의 기준은 세부적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수혜자의 성별 비율의 격차 여부와 수혜 금액의 성별 격차 여부이다. 수혜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모두 의미가 있는 지표이다. 수혜자 수의 경우, 단순히 수혜자의 성별 비율을 보는 것은 사업의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지표로서는 아주 초보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수혜 대상자 자체의 성비가 고려되지 않고

일반 인구의 성비를 기준으로 수혜자의 비율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지표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경우와 같이, 수혜 대상의 성비와 비교하여 수혜 대상자의 비율을 점검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사업의 수혜 대상이 일반 국민 전체인 경우는 사업 대상자의 성비 대비 사업 수혜자의 성비와 일반 국민 성비 대비 사업 수혜자의 성비가 동일할 것이지만, 사업 대상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일 경우, 양자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다.

사업 대상자의 성비 대비 사업 수혜자의 성비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지표는, 사업에 대한 성별 수요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여 성별 수요 대비 사업 수혜자의 비율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런 이상적인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이 내재적인 것인지, 환경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수요의 차이가 내재적인 것이라면 성별에 따른 수요 차이를 반영하여 사업의 수혜 정도를 차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 차이가 존재한다면, 사업의 수요 차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사업의 수요 차이 자체를 문제로 삼고 수정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업 수요의 성별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업에 따라 용이할 수도 있으며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수혜자 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실제 성별 수혜 금액의 차이이다. 가장 단순한 지표는 성별 일인당 수혜 금액의 차이이다. 실제 성별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지표이다. 다만, 일인당 수혜 금액의 차이는 사업의 실제 성별 수요의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만 의미가 있는 지표이다. 만약 사업의 성별 수요에 차이가 있다면, 그 수요의 차이에 따라 일인당 수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일 것이다. 더구나 사업의 수혜의 귀착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며 일인당 수혜금액은 수혜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보조금이 가장인 남자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의 혜택은 직접 보조금을 받은 남자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직접 보조금을 받은 수

혜자의 성별을 파악하여 성별 일인당 수혜 금액을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수혜의 성별 귀착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더욱 엄밀히 분석한다면 단순히 직접 전달되는 수혜 금액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사업 수혜자가 느끼는 수혜의 크기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수혜자의 수요의 특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지원이라도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업 대상의 수요 추정이나 조건부 가치추정(contingent valuation)의 방식을 활용해서 사업의 혜택의 귀착 정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적용이 실제 상황(특히 모니터링 수준의 성과관리 수준)에서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출의 실제 금액이나 사업 수혜 여부 정도의 단순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²⁾. 그러므로 단순한 성별 일인당 수혜 금액의 지표를 활용하더라도 지표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업의 상황별로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업의 수혜자나 수혜금액의 성별 차이에 바탕을 둔 지표와 더불어 사업 수혜자의 성별 만족도의 차이도 부가적인 지표로 의미가 있다. 다만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 표본 추출과 결과 해석에 있어서의 적절한 기준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특정 문제에 있어서 뚜렷이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사업 계획이나 운영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지표, 즉 사업 수혜자 수의 비율, 수혜 금액, 수혜자의 만족도는 일차적으로 사업의 수혜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없는 지를 점검하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업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적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것이다. 사업의 수혜의 귀착의 크기를 성별로 엄밀히 분리해 낼 수 있고, 이 귀착의 크기가 사업의 결과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된다면, 사업의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별도로 분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2) 우리나라 성별영향평가의 심층 평가의 경우도 대부분이 모니터링 수준의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심층평가가 목적이라면, 보다 엄밀한 기준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수혜가 성별로 귀착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사업의 수혜의 귀착 정도를 엄밀히 분석하기 어려우며, 수혜 자체의 귀착이 바로 사업의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지표 중심으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 훈련에의 참여자 수의 성별 비율을 점검하고, 성별로 교육훈련비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으나, 가장 궁극적인 지표는 교육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취업을 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 사업을 운영했다면, 교육 훈련생 중 취업률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결과지표일 것이다. 이 때 취업률의 성별차이의 원인이 교육 훈련의 내용이나 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요인의 예로서는 노동시장에서 특정 성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과다하던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차별이라는 관행이 존재하던지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부 요인을 감안하여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결과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의 결과의 실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중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기간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하여 평가 주기를 결정하여야 의미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기준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된다. 사업의 직접적 수혜의 양성평등성과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이다. 직접적 수혜의 양성평등성은 수혜자 수와 수혜금액, 그리고 성별 만족도로 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은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직접적 수혜의 양성평등성을 구성하는 지표 중 수혜자 수와 수혜 금액의 경우, 지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수혜자 수와 수혜 금액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식의 평가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지표의 양성평등성의 경우도, 외부요인과 성과실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Ⅲ. 심층평가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심층평가 사례를 활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성과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심층평가의 경우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한 경우이므로, 우리나라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성인지적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의 시사점이 IV장에서 이루어질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안의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1. 심층사례 개관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BK21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2단계 BK21사업 1차년도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가	△	○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BK21사업의 국고지원금 규모에서 성별편차가 있지 않은가	x	x (수혜자 개인차원의 분석자료는 부재하여 사업단 차원의 분석을 함)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BK21사업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x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BK21사업의 집행 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	△ (다양한 측면을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향상에 기여하는가	지위의 향상 등에 기여하는가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 분석임)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BK21사업의 집행 결과는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보건복지 분야 국가연구 개발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보건복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진의 정부투자액 성별 수혜자 성비가 사업의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여부	x	x (정확한 모집단 통계 부재)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x	○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참여연구진 만족도가 서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성별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x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결과가 여성과 남성을 성형평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x	x (사업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결과 분석이 부재함)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미칠 것인가?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	x (정확한 통계가 부재하며, 현장조사에 의한 추정 수준의 분석임)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	x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추측의 결과임)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	x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	x (어떠한 측면에서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언급없음)
논산시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 기”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		-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정책의 참여도 분석 -주민설명회, 주민교육 등에서 참석자 성별 비율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성별 참여의지, 관심정도 차이 등	X	X (과정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마을만들기사업 계획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동등한지 성별 기대 및 욕구가 동등한지	X	X (과정측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가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가	X	X (추상적 기대 수준 답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결과가 향후 유사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X (추상적 기대 수준 답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및 보건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대상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할	△	○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때 형평한지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성별 예산분리가 어려움)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	X (주로 보건복지 향상 측면에서 분석하여 성별 형평성 논의 부족)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	○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	○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X	△ (만족도조사는 상세히 이루어지고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있으나, 원인분석은 부재함)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사업집행 결과가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지 여부 .성별 취업률과 취업 특성 .여학생의 임파워먼트에 기여 여부	△	○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	-	-
방송영상 산업 인력양성 사업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인력양성 사업 예산지원금의 성별 편차 -디지털방송전문인력양성 사업 교육지원 -디렉터 스쿨 예산 성별지원	△	△ (일부 교육과정 자료 부재함)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성별 만족도 - 현업인의 교육만족도 -예비인력의 교육만족도	△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해당 정책 수혜자의 직무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관심 증진에 기여를 했는가	○	△ (직접적인 양성평등에 관한 고려 부재함)
		향후 유사한 정책의	-	-	-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사업(노동 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잠재적인 정책대상 규모의 성비와 실제 정책수혜자 규모의 성비가 형평한가	X	○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예산배분 결과가 성별로 편차가 있는가	△	X (자료부재로 다양한 측면 고려 못함)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정책(급여수준, 근로시간, 계약기간 등)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차이에 대해 원인을 기술하고 있는가	△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었는가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결과를 놓고 있는가	X	△ (양성평등에 대한 간접적 수준의 논의에 머물고 있음)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사업(복지 부)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잠재적인 정책대상 규모의 성비와 실제 정책수혜자 규모의 성비가 형평한가	○	○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예산배분 결과가 성별로 편차가 있는가	△	○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정책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x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여성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었는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가 이러한 연관고리를 깨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는가	x	○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모집단 대비 성별 수혜비율	-	-	
생명공학 육성기본 계획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단순 수혜자 성별 비율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 및 연구투자액 배분의 성 형평한가	x	○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지	○	○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 적 지위 등의 향상에	제1차생명공학육성기 본계획의 집행 결과는 과학기술분야(생명공학	○	○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사업명	지표		평가 결과	답변의 적절성
	분석내용	해당사업 성과지표		
		기여하는가?	분야) 성 평등의 진전을 위해 기여하였는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2. 심층사례 분석

1) BK21사업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① 2단계 BK21 사업 1차년도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가?

2단계 BK21 사업 1차년도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하여 형평한가를 점검한 결과, 박사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모집단 여성 비율이 각각 34.0%와 44.8%이지만, 사업 수혜자인 석사 및 박사 과정 참여 대학원생 중 여성 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27.1%와 29.9%에 그치고 있다.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2002~2006년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여성 비율은 25.0%이고, 계약교수 중 여성 비율은 24.2%로 참여인력 가운데 모집단 여성 비율에 근접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사후과정생은 사업 수혜자 중 여성 비율이 모집단 여성 비율을 초과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집단과 비교하여 여성 참여 인력이 BK21 사업의 수혜 측면에서 충분하게 포괄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BK21 사업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BK21 사업은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 여성 참여를 더 높임으로써 전체 여성 참여자 비율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BK21 사업의 국고지원금 규모에서 성별 편차가 있지 않은가?

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이 지원받은 개인별 국고지원금 현황은 분석하지 못하고 BK21 사업 국고지원금 규모에서의 성별 편차를 점검하기 위해 차선적인 방법으로 BK21사업 1차년도에 참여한 사업단(팀)장의 성별 국고지원금 현황과 사업단(팀)장 성별 평균 국고보조금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국고지원금 278,474백만 원 가운데 여성 사업단(팀)에 지원

된 금액은 10,002백만 원으로 3.6%에 머물고 있었다. 이것은 전체 569개 사업단(팀) 중 여성 사업단(팀)장 비율 7.2%와 비교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단(팀)장 성별 평균 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여성 사업단(팀)에는 평균 244.0백만 원, 남성 사업단(팀)에는 평균 508.5백만원의 국고지원금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사업단(팀) 평균 국고지원금은 여성 사업단(팀) 평균 국고지원금의 2.0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단분야를 통제하여도 여성이 단(팀)장인 사업단과 남성이 단(팀)장인 사업단이 받은 국고지원금 액수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결국 여성 사업단의 참여 인력 규모가 남성 사업단에 비해 더 작다는 반증이다. 여성들이 규모가 큰 사업단의 책임자로 더 많이 진출할 때 이러한 차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별 국고지원금 수혜 실태인만큼, 향후, 성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완된 재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III-1> 1단계 사업단(팀)장 성별 분포 및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명, %, 백만 원

	사업단장 성별 분포			사업단장 성별 국고보조금			평균 국고보조금		
	전체	여	여비율	전체	여	여비율	여성사업단	남성사업단	성별격차
과학기술분야	48	1	2.1	494,734	3,260	0.7	3,260.0	10,456.9	3.21
인문사회분야	16	2	12.5	54,141	2,767	5.1	1,383.5	2,854.1	2.06
지역대학육성분야	42	0	0.0	320,721	0	0.0	-	7,636.2	-
특화분야	15	0	0.0	59,108	0	0.0	-	5,373.5	-
핵심분야	325	23	7.1	115,387	5,599	4.9	243.4	393.8	1.62
신규분야	126	8	6.3	51,639	2,667	5.2	333.4	415.0	1.24
전체	570	34	6.0	1,095,730	14,293	1.3	420.4	2,071.3	4.93

주1) 사업단장 성별 분포에서 과학기술분야, 인문사회분야, 지역대학육성분야, 신규분야는 2005년 현황이며, 특화분야는 1999-2005년, 핵심분야는 1999-2001년 사이에 여성 사업단장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함.

주2) 평균 국고보조금의 여성사업단은 여성 사업단(팀)장이 있었던 사업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과학기술분야, 지역대학육성분야, 신규분야는 사업단장 성별 분포와 동일하며, 인문사회분야는 20개 중 2개, 특화분야는 11개 중 0개, 핵심분야는 316개 중 23개 사업단(팀)에서 여성 단(팀)장 사례가 있었음.

주3) 성별격차=남성 사업단(팀) 평균 국고보조금/여성 사업단(팀) 평균 국고보조금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KORDI) DB(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1단계 BK21 백서』 등을 바탕으로 구성.

<표 III-2> 2단계 1차년도 사업단(팀)장 성별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백만 원

		국고지원금 분포			사업단장 성별 분포		
		전체	여	여비율	전체	여	여비율
인문사회		30,745	2,630	8.6	61	8	13.1
과학기술	기초과학	43,216	459	1.1	51	1	2.0
	응용과학	125,999	935	0.7	107	2	1.9
	소 계	169,215	1,394	0.8	158	3	1.9
핵심분야	인문사회	9,022	1,220	13.5	79	11	13.9
	기초과학	10,110	1,486	14.7	56	8	14.3
	응용과학	37,831	1,606	4.2	190	9	4.7
	소 계	56,963	4,312	7.6	325	28	8.6
전문서비스		21,551	1,666	7.7	25	2	8.0
전체		278,474	10,002	3.6	569	41	7.2

자료: 1차년도 연차평가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

<표 III-3> 2단계 1차년도 사업단(팀)장 성별 평균 국고지원금

단위: 백만 원

		사업단(팀)장 성별		성별격차
		여성	남성	
인문사회		328.8	530.5	1.61
과학기술	기초과학	459.0	855.1	1.86
	응용과학	467.5	1,191.1	2.55
	소 계	464.7	1,082.7	2.33
핵심분야	인문사회	110.9	114.7	1.03
	기초과학	185.8	179.7	0.97
	응용과학	178.4	200.1	1.12
	소 계	154.0	177.3	1.15
전문서비스		833.0	864.6	1.04
전체		244.0	508.5	2.08

주1) 성별격차=여성 사업단(팀) 평균 국고지원금/남성 사업단(팀) 평균 국고지원금

주2) 성별격차가 1이면 평균 국고지원금에서 성별 차이가 없고, 1보다 크면 남성 사업단의 평균 국고지원금이 크며,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여성 사업단의 평균 국고지원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1차년도 연차평가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

③ 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수혜의 성 형평성을 점검하기 위한 세 번째 지표는 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BK21 사업의 남녀 참여 대학원생과 참여 교수(단(팀)장 포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K21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여 보았다. 그 결과,

BK21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K21 사업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서 남학생들은 'BK21 장학금만으로 학비 충당이 어려움'을 지적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학생들은 '해외 연수 기회의 부족'이나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하는 비율이 미미하나 더 높았다. 참여 교수에 대한 사업 만족도 분석에서도 대학원생과 마찬가지로 여성 참여 교수의 BK21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 참여 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참여 대학원생과 참여 교수 모두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성별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파악하고 여성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II-4> BK21 사업 만족도 성별 차이 검증

	성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df	p
전반적인 만족도	남성	414	3.02	0.618	2.523	638	0.012*
	여성	226	2.90	0.576			
	전체	640	2.98	0.606			
BK 장학금을 통해 학비마련	남성	414	3.13	0.815	1.980	639	0.048
	여성	227	3.00	0.801			
	전체	641	3.08	0.812			
해외 학회 참여 및 연수 경험	남성	414	3.10	0.850	0.763	638	0.446
	여성	226	3.04	0.793			
	전체	640	3.08	0.830			
연구실적 및 논문발표 실적의 향상	남성	414	3.02	0.759	0.389	638	0.697
	여성	226	3.00	0.696			
	전체	640	3.01	0.737			
박사과정이나 박사후과정에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	남성	414	2.89	0.835	2.269	639	0.024*
	여성	227	2.73	0.816			
	전체	641	2.83	0.831			
BK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부심	남성	411	2.82	0.832	0.123	635	0.902
	여성	226	2.81	0.767			
	전체	637	2.82	0.809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지도 교수와의 상호작용(피드백)	남성	414	3.01	0.778	1.977	639	0.048
	여성	227	2.89	0.735			
	전체	641	2.97	0.765			
산학협력프로그램(산업체 협력 연구과제 수행, 산업체 연수 기회 등)	남성	401	2.71	0.858	2.596	616	0.010*
	여성	217	2.53	0.764			
	전체	618	2.65	0.830			

*** P < .001, ** P < .01, * P < .05

(2) 사업 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BK21사업의 집행 결과는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에 기여하는가?

특히 등 BK21 사업 성과 관련 성별분리통계를 이용하여, BK사업의 추진 결과가 여성 참여자의 지위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성과 분석은 주저자 및 교신저자 여부, IF 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평면적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BK21 사업의 성과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 모집단 대비 가장 여성 참여가 높은 여성 박사후과정생이 논문 저자 중 여성 비율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BK21 사업 참여를 통해 일정 정도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밖에 경우는 모집단 대비 논문 저자나 특허 발명인에서 여성 비율인 사업 참여 비율보다 낮은 경우도 나타나는 등 BK21 사업 참여 인력 유형에 따라 성별 성과에서도 편차가 존재하였다. BK21 사업 관리에 있어 성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향후 원자료 구축 단계에서부터 성별 성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남녀 참여자의 성과 산출이 질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성과 산출에 있어 성별 격차가 발견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BK21 사업 집행 결과가 유사 정책 양성평등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인가?

2단계 BK21 1차년도 사업 집행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BK21 사업이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요구를 고려하는 보다 성 인지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참여 인력 규모나 모집단 대비 수혜율 차원 모두에서 여성이 참여가 저조한 것도 이와 같은 과제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특히 BK21 사업이 과학기술분야 고급 인력 양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BK21 사업에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된다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은 물론이고 타 HRD 및 R&D 사업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도에 이루어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과학기술분야 중 여성인적자원이 가장 많이 축적되었다고 평가되는 BT 분야에서도 국가 R&D 사업 과제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19.4%, 연구투자액은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국가 R&D 사업에서의 여성 참여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BK21 사업에서 고급 여성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보건복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1)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 ①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수혜자 성비가 사업의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보건복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진의 성별 수혜자 성비가 사업의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모집단은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전체 수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해당 기준표의 내용에 맞는 성별 통계의 부재로 인하여 여성 책임 연구진의 성별 수혜자 성비가 사업의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지 여부는 자료의 부족으로 측정할 수 없었다.

차선택으로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 나타나 있는 의약계열의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성별 통계를 살펴보았는데, 총 재학생 7,655명의 학생 중 2,592명의 여학생이 의약계열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고되며 여성 비율은 33.9%이다. 반면에 2006년에 협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내 건강증진 및 보건 영역에 해당되는 성별 책임연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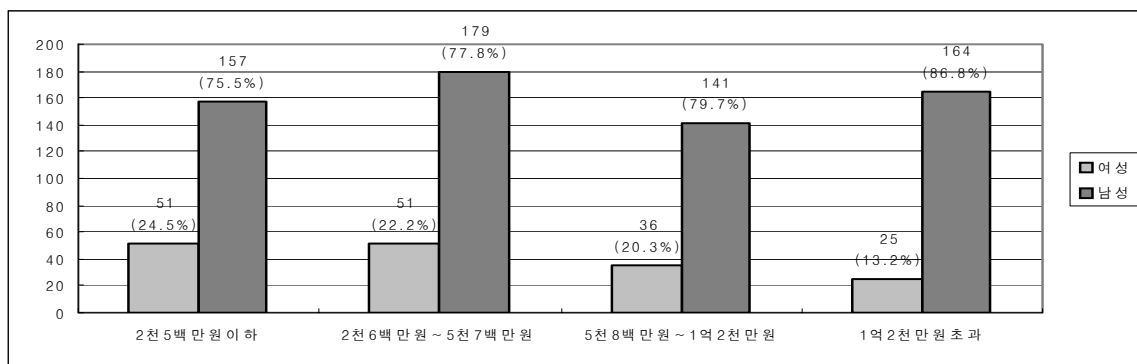
를 살펴보면, 여성 책임연구자는 전체 816명의 책임연구자 중 여성 책임연구자는 164명으로 2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가?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내 건강증진 및 보건 영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정부 투자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6년에 협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내 건강증진 및 보건 영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별 책임연구자의 평균 정부 투자액을 살펴보았다. 총 816명의 연구책임자 중 정부 투자비가 보고되지 않은 12 명을 제외한 163명의 여성 책임 연구자와 641명의 남성 책임 연구자를 포함하는 총 804명의 연구 책임자의 정부 투자비를 조사하였는데, 163명의 여성 책임 연구자가 평균 9천1백만원 정도의 정부 투자액을 받고 있는 반면에 641명의 남성 책임 연구자가 평균 1억4천1백만원의 정부 투자비를 받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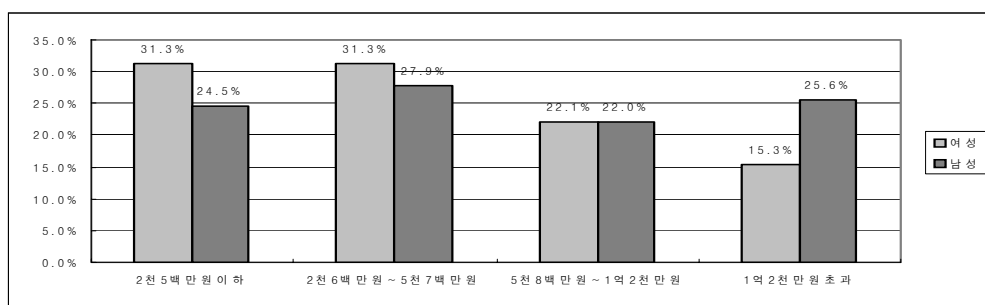
각 구간을 비교해 봤을 때 5천8백만원 이상의 정부 투자액 구간으로 투자액이 커질수록 여성 책임 연구자의 분포가 적은 반면에 남성 책임자의 분포는 구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III-1] 정부투자액 4분위 구간별 성별간 책임연구자 분포



정부투자액 4분위 구간별로 성별 내 책임연구진 분포에서, 정부 투자액별 여성과 남성 책임연구자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정부 투자액 4 분위 중 제일 낮은 구간(2천 5백만원)에 여성은 남성 보다 6.8% 포인트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제일 낮은 구간(2천 6백만-5천 7백만)에 3.4% 포인트 차이로 역시 높게 나타난다. 5천8백만-1억2천만원 이하의 정부 투자액 구간에서 여성과 남성 책임연구진의 분포는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제일 높은 구간(1억 2천만원 초과)에서는 10.3% 포인트 차이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이는 정부 투자비 측면에서 여성 책임연구진이 남성 책임연구자 보다 적은 규모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낮은 예산배분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III-2] 정부투자액 4분위 구간별 성별내 책임 연구책임자 분포



한편 정부 투자액이 비교적 큰 성장 동력 산업인 첨단 분야, 예를 들어 “나노” 혹은 “줄기 세포” 관련 연구에서는 여성 책임자의 비율과 투자비가 남성 책임 연구자 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나노와 관련된 총 9개의 과제 수 중 단지 1개의 과제에 여성 책임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투자비 측면에서 남성 책임연구진이 받는 정부 투자비는 여성 책임 연구자에 비해 약 36배이다. 줄기 세포와 관련하여 총 12개의 과제 수 중 3개의 과제를 여성 책임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다. 정부 투자비 측면에서 남성 책임연구자가 받는 정부 투자비는 여성 책임연구자에 비해 약 2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 나노 관련 연구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과제수	투자비 (백만원)	책임자 수(투자비)	
			연구 책임자(남)	연구 책임자(여)
나노 관련	9	2267	9(2207)	1(60)
줄기 세포 관련	12	1787	9(1189)	3(598)

③ 사업참여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가.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진의 만족도가 서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보건복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여성과 남성 연구진의 서로 다른 현실과 요구가 동등하게 나타났는지 여부와 성별 연구진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실제 참여한 연구진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만족도에 관련하여 무응답을 제외하고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으로 갈수록 점수를 높게 점수를 주어 5점 만점으로 코딩을 하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여성 책임연구자일 경우 평균값은 3.30 이며 남성 책임연구자일 경우 평균값은 3.55이었다. 또한 여성 책임 연구자 중 만족도 정도가 ‘보통’에 제일 높은 분포(52.5%, 21명)를 보이며 남성 책임 연구자 중 ‘약간 만족한다’에 제일 높은 분포(50.0%, 20명)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여성 책임연구자가 남성 책임연구자 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표 III-6>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만족도

(단위: 명(%))

	여성	남성	계
매우 불만	1 (2.5)	0 (0.0)	1
약간 불만	4 (10.0)	3 (7.5)	7
보통	21 (52.5)	13 (32.5)	34
약간 만족	10 (25.0)	20 (50.0)	30
매우 만족	4 (10.0)	2 (5.0)	6
무응답	0 (0.0)	2 (5.0)	2
계	40(100.0)	40(100.0)	80

나.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연구진의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여성과 남성 책임 연구자의 만족도 차이의 원인 조사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항목별 설문 문항은 예산 지원, 연구 성과에 관한 실질적 보상, 연구 능력 발전 계기, 협력 기관 협력 및 지원의 편의성, 성과 관리측면 지원 충족도, 사업 진행과정 중 개인 사정(임신, 출산, 가정 돌봄)의 배려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갈수록 점수를 높이 주어 5점 만점으로 코딩 하고 평균값을 구하고 제일 높은 분포의 항목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족도 차이의 원인과 관련된 각 항목의 평균값을 성별로 고찰하였을 때 여성 책임연구자가 남성 책임연구자보다 평균값이 낮은 항목은 ‘성과관리 측면’, ‘연구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다. 이는 여성 책임 연구자가 남성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 여성 책임연구자가 남성 책임연구자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책임연구자가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과 관련된 자원과 지원이 남성 책임연구자보다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연구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라는 항목에서 여성 책임연구자가 남성 책임연구자보다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 책임 연구자의 연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남성 책임연구자보다 열악함을 뜻한다.

(2)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보건복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및 결과가 여성과 남성을 성 형평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용과 결과 측면에서 성평평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내용인 암 연구 현황의 성 인지성을 살펴보고 있다. 국민건강심층분석보고서(2001년도)에 따르면 국내 유병률이 높은 6대 다빈도 암에는 위암·폐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여성의 76.5%와 남성의 71.3%가 이들 6대 암에 걸린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구 과제들이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의 생식기 암에만 집중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임신 및 수유에 관한 연구는 물론, 직장 여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연구, 여성 노인 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연구 과제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등의 일반 암 연구에서 성인지성을 고려한 과제는 보이지 않았다. 폐암 관련 과제 중에서 “국립의료원 호흡기 내과에 내원한 폐암 환자의 임상양상” 과제에서는 “폐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연령에 따른 변화, 성별의 차이” 등을 알아본다는 연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외의 과제에서는 성별 차이를 보는 연구 내용을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기준인 동 사업의 내용과 결과 측면의 성 형평성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1)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

①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 (시장 상인 및 소비자)과 비교해 형평한가?

세부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의 형평성을 판단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케이드,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혜도는 모집단의 성비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 화장실 등에 대한 시각적 안내가 없어 실제 소비자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남시장의 엘리베이터는 크기가 작아서, 유모차 또는 카트를 2대 이상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실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정 이상의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보여지며, 대상 모집단에 대한 명시와 수혜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는가?

예산 지원금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2006년도의 예산 배정과 집행을 볼 때, 성별로 편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도의 예산은 총 30억 규모인데 90% 이상이 시설 개선을 위하여 투입되었다. 2006년도에 시설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시장은 가음정 시장, 상남시장, 명서 시장 등으로, 이 세 시장은 아파트 단지화 주택이 주변에 형성된 골목형 재래시장으로서 상인과 이용객 모두 여성의 비율이 특히 높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케이드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시설 개선에 집행된 예산은 성별로 편차 없이 지원되었다고 보고 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65억 규모인데, 이 중 80% 이상이 시설 개선과 현대화에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20%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시장 상인 교육 등에 배정되었다. 재래시장의 마케팅 강화와 상인 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이 작은 이유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위한 예산을 많이 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처럼, 예산 지원금이 시장 상인이나 소비자의 성별 구성비에 비례하여 책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 1인당 지원된 예산의 규모를 계산할 수는 없으나, 2006년도의 동사업은 성별 균형이 맞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명확한 분석 결과로 평가하기는 부적절하며 향후 세부사업별로 예산 집행 내역과 수혜자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현장 방문 면접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 상인 교육과 시설 현대화 등에 대해서 여성 상인과 남성상인 간에 만족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를 조사할 당시 응답률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현저히 높았다, 현장 방문 조사시 여성 조사원들이 상품권을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서 면접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 하였을 때, 남성 상인의 90% 이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여성 상인이 면접에 응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설문 조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설문문에 참여한 여성 상인의 수는 100명이 이르는 반면, 남성 상인은 9명에 불과하였다. 재래시장 소비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77.9%로 남성에 비하여 더 높기는 하나, 이는 시장 소비자의 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창원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이후 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대하여는 대체로 활성화되었다는 긍정의 비율(여성: 70.1%, 남성 67.3%)이 부정의 비율에 비하여 높았으며, 이러한 긍정의 비율에 대한 성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매출 증대에 대해서는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긍정의 비율이 낮았으나(여성: 63.2%, 남성 61.2%) 이 역시 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현대화 사업 이후 고객 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여성 78.3%, 남성 70%), 상인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대체로 여성이 현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비율

이 약간 더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여성 $M = 4.2$, $SD = 1.0$; 남성 $M = 4.1$, $SD = 1.0$, $t = 1.06$).

이처럼,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시장 상인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성에 따른 정책 만족도 또한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정책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상인 및 소비자의 정책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은 양성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장 설치, 시장 안전 확보 등은 여성 소비자의 시장 접근도와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대체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상인과 소비자의 정책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사업수혜의 양성평등성의 세 번째 평가지표인 성별 주관적 만족도 차이와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②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결과가 향후 유사한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창원시 재래시장은 경남 전체 재래시장(185개)의 17.3%에 이르며,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결과는 경남도내 타 시·군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의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유사 정책이 양성평등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담당 공무원의 경우, 성 인지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 과정에 연결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 인지적 관점과 정책의 연계성 부족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성 교육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계획의 성 인지적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성 인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4) 논산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

(1)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① 정책의 성별 참여도, 관심도, 이해도가 성별로 유사한가?

동 사업에 대한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성별 참여도, 관심도, 이해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정책결과 평가측면의 기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평가 기준과 중복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정책수혜 측면 분석을 위해서는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에 대하여 기술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마을행사나 회의 참여 정도는 대체로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성별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표 III-7> 마을행사나 회의 참여 정도

	합계	전혀 참석하지 않음	참석하지 않는편	보통	참석하는편	매우 참석함
남성	67(100.0)	2(3.0)	4(6.0)	8(11.9)	21(31.3)	32(47.8)
여성	73(100.0)	-	6(8.2)	19(26.0)	24(32.9)	24(32.9)
합계	140(100.0)	2(1.4)	10(7.1)	27(19.3)	45(32.1)	56(40.0)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주민회의(또는 주민설명회)의 참여는 남녀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모두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94.0%가 여성은 94.6%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나 주민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남녀 모두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주민설명회나 마을회의 등은 마을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인데, 이러한 마을회의에서 참여의 적극성이 성별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소극적인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마을회의에서 의견을 말하는 쪽에 해당되는 비율은 남성이 85.3%인데 반하여, 여성은 41.9%로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며, ‘자주 의견을 말함’이나 ‘항상 의견을 말함’과 같이 매우 적극적인 참여 비율에서는 남성이 38.2%, 여성이 13.5%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는 남녀간의 참여의 적극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로 들음’과 같이 수동적 참여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함’이 17.1%, ‘가끔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함’이 20.0%, ‘매우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함’은 11.4%인데 반하여, 남성은 ‘가끔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함’이 40.6%, ‘매우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함’이 28.1%로 공식적인 의견 표출이 전체의 68.7%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III-8> 마을회의 참여의 적극성에서의 성별 차이

	합계	거의 의견을 말하지 않음	별로 말하지 않는 편	가끔의견 을 말함	자주 의견을 말함	항상 의견을 말함
남성	68(100.0)	8(11.8)	2(2.9)	32(47.1)	20(29.4)	6(8.8)
여성	74(100.0)	22(29.7)	21(28.4)	21(28.4)	8(10.8)	2(2.7)
합계	142(100.0)	30(21.1)	23(16.2)	53(37.3)	28(19.7)	8(5.6)

*** P<.001

<표 III-9>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의견
개진 정도

	합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로 들음	주위 사람들한테 내생각을 말함	가끔식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함	매우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함
남성	64(100.0)	8(12.5)	12(18.8)	26(40.6)	18(28.1)
여성	70(100.0)	36(51.4)	12(17.1)	14(20.0)	8(11.4)
합계	134(100.0)	44(32.8)	24(17.9)	40(29.9)	26(19.4)

*** P<.001

이는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주민회의에서 남성들이 회의를 주도해가고, 남성들의 의견이 주민 다수의 의견처럼 여겨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사업 담당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의견조사나 여성, 고령자 집단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인터뷰나 간담회와 같은 것들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

<표 III-10>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성별
인지도

사업추진 인지도	합계	안다	모른다
남성	68(100.0)	67(98.5)	1(1.5)
여성	75(100.0)	73(97.3)	2(2.7)
합계	143(100.0)	140(97.9)	3(2.1)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성별 간 차이가 거의 나타 나지는 않는데, 남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자세히 알고 있다’가 79.4%, 여성은 7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다만 ‘자세히 알고 있다’의 경우 남성은 33.8%, 여성은 20.8%로 조금 차이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 내용이나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력과 인지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III-11>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에 대한 성별 인지도

사업 인지도	합계	들은 적은 있지만 전혀 모른다	별로 알지 못한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자세히 알고 있다
남성	68	3(4.4)	11(16.2)	31(45.6)	23(33.8)
여성	72	7(9.7)	9(12.5)	41(56.9)	15(20.8)
합계	140	10(7.1)	20(14.3)	72(51.4)	38(27.1)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남녀 모두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참여의사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을에 가져다 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하여 기대나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은 77.6%, 여성은 58.9%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참여의사의 정도를 본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참여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III-12>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 정도

참여의사	합계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음	참여하고 싶지않는편	보통	참여하고 싶은편	매우 참여하고 싶음
남성	67(100.0)	1(1.5)	3(4.5)	11(16.4)	18(26.9)	34(50.7)
여성	73(100.0)	2(2.7)	2(2.7)	26(35.6)	20(27.4)	23(31.5)
합계	140(100.0)	3(2.1)	5(3.6)	37(26.4)	38(27.1)	57(40.7)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의식 차이 외에도 현실적 여건에 있어 참여 의사를 망설이게 하는 점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이 참여에는 구체적으로 육체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의 연령에서 여성들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자가 많다는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마을 주민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자 마을 자체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것인 된장체험장과 감체험장 건립 및 운영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결국 여성의 역할이 많이 개입되는 된장체험장과 감체험장이다 보니 마을 여성들의 관심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앞으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나 인식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채나물 재배 및 판매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직접 마을로 찾아오는 업자들과 거래를 하기도 하고 영농활동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체험장의 운영과 관리나 기타 마을만들기 세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논의의 과정에서 남성 독점적이거나 주도적이지 않고, 여성들도 실질적인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수혜자인 마을주민들의 정책 만족도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마을만들기 사업의 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을 질문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주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13>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계획·추진과정에 대한
만족도**

추진과정 만족도	합계	전혀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는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함
남성	67(100.0)	2(3.0)	-	13(19.4)	28(41.8)	24(35.8)
여성	73(100.0)	1(1.4)	2(2.7)	31(42.5)	19(26.0)	20(27.4)
합계	140(100.0)	3(2.1)	2(1.4)	44(31.4)	47(33.6)	44(31.4)

* P<.05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65.0%),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만족하는 편’이 41.8%, ‘매우 만족함’이 35.8%인데 반하여, 여성은 ‘만족하는 편’이 26.0%, ‘매우 만족함’이 27.4%로 남성보다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성별 간 만족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만족도와 관련하여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반영된 편’이나 ‘매우 반영됨’으로 응답한 사람은 63.6%인데, 성별간 차이를 보면 남성은 ‘보통’이 16.4%, ‘반영된 편’이 40.3%, ‘매우 반영됨’이 37.3%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77.6%에 이르는 반면에, 여성은 ‘보통’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43.8%, ‘반영된 편’ 30.1%, ‘매우 반영됨’이 20.5%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한 비율이 50.6%에 불과하여, 성별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과정이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여성들은 뒷전에 물러나 있거나 간접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의견을 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이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는가?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며,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참여가 남성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전통적인 성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논산시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의 준비와 추진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역할 증대와 경제적 소득 증대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결과가 향후 유사 정책의 양성평등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행자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농림부, 산림청, 행자부 등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과정으로는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타의 다른 정책들과 다른 점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산시의 햇빛촌 바랑산 마을만들기 사업이 행정기관과 남성 리더 중심의 추진방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앞으로 중점 사업들이 여성의 참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참여와 아울러 사업 추진의 권한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다른 유사한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공공보건기관의 진료 및 보건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대상 지역의 인구 구성비를 고려할 때 형평한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보건기관 이용에 고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공보건기관 진료실적과 보건사업실적의 성별분리통계를 산출한 후 해당 지역의 모집단 인구 구성비와 비교하고 있다.

시·군별 보건사업에서 성별분리가 가능한 사업에 있어 성별 수혜도를 도출하여 여성 비율을 제시한 것이 <표 III-14>이다. 각 사업에서 여성 수혜비율이 해당 지역의 전체 여성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진하게 표시해보았다. 먼저,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김해·의령·합천에서, 영양개선은 거제·남해군이, 예방접종은 거창군에서 여성 수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관리는 마산·진주·통영·김해·밀양·의령·함안·산청·함양 등 많은 지역에서 여성 수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병 관리는 함안군, 건강검진은 마산시·창녕·함양군에서, 정신보건은 통영·김해시·함안·고성군에서 여성 수혜비율이 낮게 나타나 보건사업별로 성별 수혜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여성 수혜비율이 전체 수혜자의 70%를 넘는 등 남성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저조가 사업도 상당부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과 성인병 관리의 경우 남성의 수혜율이 낮아 남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I-14> 보건사업의 성별 수혜 정도(2006년)

(단위: 명, %)

	구강 ¹⁾	영양 개선 ¹⁾	예방 접종 ²⁾	결핵 관리 ¹⁾	노인 보건 ¹⁾	방문 보건 ¹⁾	성인병 관리 ³⁾	건강 검진	정신 보건
마산	69.7	70.0	64.3	41.1	56.9	68.1	57.0	44.1	48.8
진주	56.4	55.3	54.4	45.0	65.5	60.0	62.8	50.9	50.0
통영	70.0	69.8	69.3	37.5	60.0	60.0	60.0	60.0	20.0
사천	54.5	53.9	56.2	62.0	64.4	70.6	60.4	65.0	52.5
김해	47.0	70.0	49.1	30.0	64.3	64.1	49.7	60.0	44.0
밀양	57.4	70.0	55.5	46.2	83.3	67.7	61.2	56.3	56.1
거제	58.4	44.2	51.0	49.7	52.3	59.7	60.2	54.3	53.3
양산	50.5	48.7	48.7	49.1	52.1	51.4	85.2	51.7	46.3
의령	44.9	57.6	57.6	42.2	50.5	68.1	65.2	74.8	64.0
함안	-	63.3	56.7	27.7	-	71.9	8.5	43.5	29.7
창녕	48.2	70.0	54.1	71.5	-	76.3	68.1	40.0	-
고성	46.2	73.4	52.5	49.8	60.1	61.9	57.1	57.4	38.9
남해	59.5	42.8	56.0	53.2	67.7	70.7	68.0	56.2	66.1
하동	53.9	66.7	54.9	56.3	62.9	60.0	59.3	49.0	80.6
산청	56.6	-	52.3	13.9	67.4	63.0	68.4	51.3	77.8
함양	60.1	75.0	58.2	38.5	66.1	70.5	66.0	45.0	57.8
거창	53.8	51.9	48.6	55.9	51.8	54.0	52.4	54.0	52.4
합천	50.0	66.6	66.8	56.1	60.0	66.7	68.3	60.0	-

주: 1) 연인원임, 2) 정기·임시·연인원임, 3) 고혈압, 당뇨 포함임, 4) 해당 지역의 전체 여성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진하게 표기하고 성별분리하지 못한 경우는 -표시함.

② 사업 예산 수혜의 성별 형평성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2006년 진료실적을 성별 분리하여 재산출한 후 전산화 미흡, 기록부재 등으로 ‘산출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혜자 성비와 사업 예산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2006년 진료실적에서 총 수혜자 1,629,418명 가운데 여성은 997,322명으로 61.21%가 여성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수혜자가 많았고 경상남도 전체 여성비(52%)도 초과하고 있어, 실적을 감안하면 예산 수혜에 있어서도 남성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20개 시·군 공공보건기관의 장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와 같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진료는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 보건소·지소·진료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일반진료실·물리치료실 등 주로 사용하는 진료실 자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장비가 남·여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청진기·혈압계·냉장고·

진찰대 등) 장비 구입에 투입된 예산이 성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지원과 방문보건세트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보건사업 실적은 모든 시·군에서 여성 수혜비율이 남성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여성 인구 비율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남성의 수혜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업 수혜결과에 대한 성별 만족도

가. 성별에 따른 수혜 및 이용 만족도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재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보건기관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및 장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이용 전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성별로 비교하였다.

‘도움이 된다(대체로+매우 도움이 된다 포함)’는 경우 남성 67.5%(27명), 여성 61.5%(48명),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남성 7.5%(3명), 여성 11.5%(9명)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5> 성별에 따른 지원 사업 만족도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남성	4	10.0	23	57.5	10	25.0	3	7.5	40	100.0
여성	9	11.5	39	50.0	21	26.9	9	11.5	78	100.0

나. 성별에 따른 개선사항 요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공공보건기관의 개선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충과 각종 장비보강, 진료과목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현 상태로 만족한다(27.7%)’가 남성에 비해서 다소 높았으나 ‘진료과목 확대(27.7%)’에 대한 욕구도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치료실 증설/신설(16.0%)’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농어촌 공공보건기관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진료과목이 부족한데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골관절염, 디스크 등과 관련한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 진료과목 증설과 물리치료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16> 공공보건기관의 개선사항(다중응답)

(단위: 명, %)

	전체	없음 (현상 태 만족)	보건소 건물 확장	각종 장비 보강	우수 인력 확충	진료 과목 확대	물리 치료실 증설/ 신설	방문 진료 신설/ 확대	건강 교실 운영	서비 스 개선	기타
남	56(200.0)	13(23.2)	4(7.1)	18(32.1)	35(62.5)	10(17.9)	6(10.7)	9(16.1)	8(14.3)	7(12.5)	2(3.6)
여	94(200.0)	26(27.7)	6(6.4)	23(24.5)	50(53.2)	26(27.7)	15(16.0)	13(13.8)	14(14.9)	10(10.6)	5(5.3)

(2)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성별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였는가?

경상남도의 공공보건기관 가운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개·보수 포함)이 이루어진 기관은 보건소 19곳(95%), 보건지소 61개소(36%), 보건진료소 50개소(23%)에 이르고 있다.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의 지원은 보건소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건지소는 방문보건 실적을 감안하여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보건소장과 공공보건기관 종사자들을 면담한 결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보건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신규 사업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응답하였다. 보건소장 K는 ‘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에서 효과가 가장 컸는데 주로 노인이나 만성질환 환자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남성 어르신은 차량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라도 이용해서 찾아오시는데 여성 어르신들은 대부분 걸어서 찾아오는데 보행이 힘들시면 못 오시는 경우가 많죠. 차량은 보건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소나 진료소에도 소형차나 스쿠터 같은 차종이 지원되면 더할나위 없죠’라고 하였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경남지역 공공보건기관의 하드웨어 구축을 통해 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으며 2014년까지 연장 추진된다는 점에서 후속 사업에 미칠 영향을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사업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서 양성평등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성별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사업으로 경상남도의 408개 공공보건기관 가운데 314개소(77%)의 시설개선과 장비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는 이전신축(89개소)을 포함하여 ‘보건정보시스템’구축, 방문보건차량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업 담당자와 공공보건기관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본 사업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담당자 P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쯤 보건소 건물은 거의 흉가 수준이나 다름없었을걸요. 그리고 컴퓨터며 보건정보시스템이며 모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진료실적도 보건정보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중앙에서 취합하고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도 가능해졌지요. 앞으로 성별 구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프로그램 상에 성별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고서식에서 요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했다.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동 사업의 심층평가 결과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양성평등적 측면의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6)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

(1)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사업 수혜자(참여 학생, 사업단 신규 인력 채용)의 성비가 사업대상 모집단과 대비하여 형평한가?

사업수혜자 성비가 사업대상 모집단과 대비하여 형평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사업단 신규인력채용 측면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최근 전체 131개 사업단 중에서 120개의 사업단들이 교육인적자원에 제출한(2006.11.17) 성과자료제출서를 통해 전체 사업단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성별 참여 실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4년 전체 사업단 여학생 비율(모집단)이 32.3%이고 2005년에는 32.8%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전공 및 학습(창업) 동아리 지원은 (2004년 36.6%, 2005년 36.2%) 낮지 않다. 해외 견학의 여학생 참여율은 2004년에 5.1%로 상당히 낮다가, 2005년에는 36.9%로 증가하였다. 어학 및 정보화 교육은 2004년 29.3%였다가 2005년 32.4%로 상승하였다. 졸업생 리콜 교육의 여학생 비율도 2004년 26.3%였다가 2005년에는 33.4%로 올랐다. 창업촉진 프로그램 교육의 경우 2004년 35.4%, 2005년 38.8%로 전체 여학생 비율보다 다소 높다. 전반적으로 2004년 보다 2005년에 여학생의 참여 프로그램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I-17> 120개 사업단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성별 참여 실적

단위 : 명, (%)

주요항목	2004				2005			
	건	남	여	계	건	남	여	계
전공 및 학습(창업) 동아리 지원	1077	8635 (63.4)	4981 (36.6)	13616 (100)	1659	11685 (63.8)	6623 (36.2)	18308 (100)
해외견학 및 연수	575	4868 (94.9)	259 (5.1)	5127 (100)	907	6319 (63.1)	3688 (36.9)	10007 (100)
어학 및 정보화 교육	2928	38941 (70.7)	16102 (29.3)	55043 (100)	3193	56864 (67.6)	27200 (32.4)	84064 (100)
졸업생 리콜교육	389	4059 (73.7)	1448 (26.3)	5507 (100)	384	4377 (66.6)	2196 (33.4)	6573 (100)
창업촉진 프로그램 교육	161	2503 (64.6)	1372 (35.4)	3875 (100)	253	4063 (61.2)	2578 (38.8)	6641 (100)

출처: 사업단 성과자료제출서 (2006)

역시 120개 사업단들의 성과자료제출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단의 산업체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2004년에 43.0%, 2005년에 43.8%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사업단의 여학생 참여율이 2004년에 32.3%, 2005년에 32.8%였던 것을 고려하면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이로 보아 여학생의 산업체 인턴십 참여율이 모집단과 대비하여 볼 때 낮다고 볼 수 없다.

<표 III-18> 120개 사업단 산업체 인턴십 성별 참여 실적

단위 : 명, (%)

주요항목	주요 추진 실적 및 내용							
산업체 인턴십	참여업체(수)	참여 인원(2004)			참여업체(수)	참여 인원(2005)		
		남	여	계		남	여	계
	2234	2927 (57.0)	2212 (43.0)	5139 (100)	2402	3581 (56.2)	2794 (43.8)	6375 (100)

출처: 사업단 성과자료제출서 (2006)

다음으로 주요 인력 확보의 측면에서 사업의 수혜를 분석하기로 한다. 아래의 전체 사업단 관련 <표 III-19>은³⁾ 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업단

들이 2006년 11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성과자료제출서에 기초로 하고 있다. 전임 교수 신규 교원 채용에서 여성은 2004년에 남성 대비 18.1%, 2005년에 19.0%를 나타낸다. 겸임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10.5%로 나타나고 있으며 초빙인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은 2004년과 2005년에 약 25%로 나타나 전임과 겸임 비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 참여인원의 경우 남성대비 여성 교수의 사업단 참여 비율은 신규교원 채용 현황과 유사하다. 2004년과 2005년에 여성 전임 교수 비율이 제일 낮고 초빙인 여성 교수비율이 겸임 여성 교수비율 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 교수의 전체 사업단 추진 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 평가 위원회에서의 참여 현황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실험실습보조원 및 기자재 관리요원의 경우 2004년에는 여성이 29.1%, 2005년에는 35.3%로 나타났다.

3) 3차 년도에 시작된 사업단들은 관련 자료가 없고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시작된 사업단 중 관련 자료가 없는 사업단들을 제외한 총 120개 사업단에 관한 표들이다.

<표 III-19> 120개 사업단 사업추진 주요인력확보

단위: 명, (%)

성과지표		2004년			2005년		
		남	여	계	남	여	계
신규교원 채용	전임	344 (81.9)	76 (18.1)	420 (100)	302 (86.0)	71 (19.0)	373 (100)
	겸임	333 (89.5)	39 (10.5)	372 (100)	383 (89.5)	45 (10.5)	428 (100)
	초빙	176 (75.9)	56 (24.1)	232 (100)	171 (75.0)	57 (25.0)	228 (100)
사업단 참여인원	교원(전체)	4481 (90.4)	477 (9.6)	4958 (100)	5832 (89.7)	673 (10.3)	6505 (100)
	전임	3367 (93.1)	250 (6.9)	3617 (100)	4301 (92.0)	372 (8.0)	4673 (100)
	겸임	585 (84.6)	106 (15.3)	691 (100)	863 (84.2)	162 (15.8)	1025 (100)
	초빙	222 (70.3)	94 (29.7)	316 (100)	284 (72.3)	109 (27.7)	393 (100)
	학부생	80395 (67.1)	39347 (32.9)	119742 (100)	94683 (66.1)	48600 (33.9)	143283 (100)
	석사과정생	3153 (78.0)	887 (22.0)	4040 (100)	8385 (78.0)	2367 (22.0)	10752 (100)
	박사과정생	1640 (82.7)	343 (17.3)	1983 (100)	2558 (80.2)	632 (19.8)	3190 (100)
실험실습보조원 및 기자재관리요원		1313 (70.9)	540 (29.1)	1853 (100)	1585 (64.7)	864 (35.3)	2449 (100)

출처: 사업단 성과자료제출서 (2006)

② 성별 집행된 예산은 형평한가?

120개 사업단의 성과자료제출서를 통해 전체 사업단의 장학금 지원 실적을 성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1차년도인 2004년도의 실적을 보면, 장학금을 받은 학부생들 중 여학생의 비율이 36.0%로 나타나서 전체 사업단 학부 과정의 여학생 비율 32.9%와 비교해 약간 높다. 대학원 과정은 장학금 수혜자 중 여학생이 21.0%로 나타나는데, 전체 사업단 대학원 과정의 여학생 비율인 20.5%와 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5년도에는 학부 과정의 장학금 수혜 학생 중에 여학생이 36.8%로 나타나서, 전체 사업단 학부 과정의 여학생 비율인 33.9%와 비교해 약간 높았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의 장학금

수혜자 중 여학생은 18.5%로, 전체 대학원 과정의 사업단 여학생 비율인 21.5%와 비교할 때 약간 낮다.

<표 III-20> 120개 사업단 장학금 지원 성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원학생수 (명)		
		남	여	계
2004	학부생	31805 (64.0)	17872 (36.0)	49677 (100)
	대학원생	2645 (79.0)	704 (21.0)	3349 (100)
2005	학부생	38892 (63.2)	22632 (36.8)	61524 (100)
	대학원생	4729 (81.5)	1072 (18.5)	5801 (100)

출처: 사업단 성과자료제출서 (2006)

- ③ 성별 분리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가?

최운실 등(2006)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에 따라 수행한 누리사업 정책고객만족도 조사 및 정책지지도 제고방안 연구에서 전국의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광범위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52.6%가 누리사업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은 38.5%였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하였다. 누리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남학생의 55.5%, 여학생의 46.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1$).

<표 III-21> 성별 누리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

구분		누리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성별	남성	7	38	151	181	64	441
		1.6%	8.6%	34.2%	41.0%	14.5%	100.0%
	여성	3	9	97	82	12	203
		1.5%	4.4%	47.8%	40.4%	5.9%	100.0%
계		10	47	248	263	76	644
		1.6%	7.3%	38.5%	40.8%	11.8%	100.0%

$\chi^2 = 18.693^{**}$ ($p < .01$)

출처: 최윤실 등(2006)

(2)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사업집행의 결과가 성별 취업률 향상에 고르게 기여하는가? 사업집행 결과가 성평등과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가?

먼저 2004~2006년 기간 동안 여학생 취업률({성별 취업자 수/성별 취업 대상자} *100)을 살펴보면, 2004년에 68.2%, 2005년에 74.0%, 2006년에는 78.2%로 증가하였다. 남학생과 비교할 때 2004년, 2005년은 비슷하였고 2006년에는 여학생 취업률이 5.5% 포인트 차이로 남학생 취업률보다 높다. 그러나 고용형태별로 취업률({성별 비정규직 혹은 정규직 취업자 수/성별 비정규직 취업자 수 + 성별 정규직 취업자 수} *100)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여학생 취업률(17.2%)이 남학생(11.7%) 보다 높다. 여학생 취업률이 남학생과 비슷하거나 높다 하더라도 남학생 보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임금이 낮은 직장 에 근무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조건과 복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기업에 취업하는 여학생 비율(19.3%)은 남학생의 비율(25.2%)보다 낮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수도권과 수도권에서 취업률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단 관계자 및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업단 참여가 학생들의 성평등의식을 제고하거나 여학생의 임파워먼트를 가져왔는지 살펴보았다. 전남대사업단의 관계자와 학생들에 따르면, 본 사업에의 참여여부가

여학생들이 비전통적인 분야로 진출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사업단 참여 자체 보다 개인의 직업 및 진로계획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본 사업에의 참여여부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사업단 관계자나 학생들 스스로의 성 인지력이 그다지 높지 않고 본 사업에 성평등 관점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상대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면접한 바에 따르면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여학생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고 실제 취업준비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 학생들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에 비하여 외부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학생들은 해외 바이오업체 견학이나 타 대학의 바이오 학과와 함께 한 이벤트(예: 바이오 공모전, 연합바이오축제 등)를 통하여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시각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타 대학 학생들은 어떻게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자극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여학생들의 취업 현실을 특별히 고려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누리사업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여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직업 생활에 대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한 진로선택을 하도록 권장하거나 여성 취업의 장벽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임파워하는 효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7)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

(1)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주관 교육연수기관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은 성별 차이가 있는가?

가.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의 성별 지원

2005년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온-오프라인 교육)의 총 예산은 19억원 규모이며 이중 교육시스템구축비용을 포함한 오프라인 교육의 예산은

14억원이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예산은 교육과정 개발비용을 포함하여 5억원이었다. 오프라인은 하드웨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온라인 교육은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두 과정을 상호비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예산의 성별비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각각의 영역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프라인교육은 2005년 총 인원이 1,010명이었으므로 1인당 평균교육비용은 1,386,000원이었다. 오프라인 교육에는 언급했듯이 순수 교육운영비 외에 오프라인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비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프라인 예산의 성별비율은 참여인원수에 조응하여, 남녀 각각 81%와 17%이다. 온라인 교육은 2005년 총 인원이 2,163명이었으므로 1인당 평균교육비용은 231,000원이다. 온라인 교육 예산의 성별비율 역시 참여인원 수에 비례하여 남녀 각각 62%와 32%이다.

오프라인 교육의 인원과 예산배분의 남녀 성별비율이 4:1의 수준이 넘고 있으므로 예산배분이 남성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비율이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온라인 교육 역시 남녀 약 2:1의 수준이므로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예산배분이 전반적으로 남성편중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예산의 성별 편중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연수생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공익과정과 미디어 교육과정의 예산비중이 많지 않다는 주관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하면 예산에 있어서의 성별 편차는 정량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더욱 클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성별 편중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연수생에 대한 성별통계와 더불어 각 교육과정 별 예산배분에 대한 산출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 어떤 교육과정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지, 특히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비율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예산의 성별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나. 디렉터 스쿨 예산의 성별 지원 현황

디렉터 스쿨과 관련한 예산의 성별 비율 역시 전체 예산을 전체 인원으로 나눠 산출한 1인당 평균교육비용에 여성 교육연수생의 수를 대입한 것이다.

<표 III-22> 2006년 디렉터 스쿨 예산지원금의 성별 비율

(단위: 원; 명수(%))

구 분	금 액	남성 교육생의 수	여성 교육생의 수
국고	900백만원	22(47.8%)	24(52.2%)
자부담	100백만원		
총	1,000백만원	478백만원	522백만원

KIPA의 디렉터 스쿨은 2005년도에는 졸업생 43명 중 여성 교육연수생이 13명으로 전체 인원의 30.2%를 차지했다. 이에 비하여 2006년도에는 여성 교육연수생의 비율이 52.2%로 더욱 증가했다.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예산을 감안한다면 전체 예산 중 여성 교육생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오히려 2005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디렉터 스쿨의 교육과정이 제작 PD과정과 마케팅 PD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나 주관 기관의 설명에 의하면 예산을 구분하여 설정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의 정확한 성별배분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과정별 순수 교육운영비의 산출이 필요할 것이다. 마케팅 PD과정에 남성의 수가 항상 적었던 것과 2005년까지 제작 PD과정에 남성과 여성의 수가 약 3:1의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해볼 때 교육과정별로 예산의 성별 편중성이 존재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며, 예컨대 인원선발 시 동점인 경우, 이러한 변수를 참작해야 할 것이다.

② 해당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가?

먼저 재교육기관에 따른 교육만족도에 대한 현업인의 응답과 설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3> 공공기관에서의 재교육에 대한 성별 만족도

	수강 인원의 적절성	강사의 강의능력	교육용 장비의 질	수강여건	강의 교재의 충실성	교육 기간의 적절성	업무와의 연계성
남성	2.32	2.13	2.25	2.42	2.81	3.00	2.39
여성	2.75	2.25	2.63	2.50	3.13	3.00	3.00
전체 평균	2.41	2.15	2.31	2.44	2.87	3.00	2.51
F값	1.930	.138	1.198	.060	.708	.000	3.486

*p<.05, **p<.01, ***p<.001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위의 표는 KBI 또는 KIPA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제시된 항목들에 대해 응답한 것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설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서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또한 각 항목별로, 성별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분석을 통해서 응답자들은 공공기관에서 받은 재교육 연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인력 교육만족도의 경우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체계의 미흡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공기관 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유는 취업과의 연계성이었다. 성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항목별로 편차를 보였다.

<표 III-24> 학교교육에 대한 성별 만족도 비교

	수강 인원의 적절성	강사의 강의능력	교육용 장비의 질	수강여건	강의 교재의 충실성	교육 기간의 적절성	취업 으로의 연계성
--	------------------	-------------	-----------------	------	------------------	------------------	------------------

남성	2.65	2.42	2.71	2.62	2.67	2.62	3.13
여성	3.24	2.82	2.67	2.67	3.03	2.76	3.21
전체 평균	2.90	2.59	2.69	2.64	2.82	2.68	3.17
F값	7.567*	4.210*	.033	.032	3.358	.485	.170

*p<.05, **p<.01, ***p<.001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

예비인력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을 구한 후, 각 평균 값이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현업인에서와 달리, 예비인력의 경우, 수강인원의 적절성과 강사의 강의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성별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만족의 차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수강인원의 적절성에 대해 남성은 2.65점, 여성은 3.24점을 보였다. 강사의 강의능력에 대해서도 여성은 2.82, 남성은 2.42점의 평균을 보였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성별 구별 없이 취업으로의 연계성이었다.

(2)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해당 정책 수혜자의 직무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관심 증진에 기여를 했는가?

교육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가시화되었듯이 교육연수생들이 받는 교육과, 업무 또는 취업과의 연계성은 교육 참여자들의 직무와 진로에 대한 전망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디렉터 스쿨의 경우 졸업생 100%를 취업시킨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교육과 취업연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상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취업하며, 취업률의 성별 비율을 추적하기 어려우나 2004년도의 경우, 제작 디렉터와 마케팅 디렉터 과정에서 각각 1명만이 미취업했음을 고려할 때 여성과 남성 모두 교육과 취업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양성사업(온-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 이후 설문문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확인을 하며, 단계가 높은 교육과정이 신설되면 이를 공지하고 홍보하는 것을 통해, 현업인의 지속적인 직업능력 향상과 그것을 통한 직업전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사와 같은 민간자격증제도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추진의 방향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예비인력의 보다 용이한 취업에 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디어 교육사를 배출하는 교육과정에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어 여성인력의 직업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판단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8) 사회적일자리 창출정책

8-1)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정책

(1)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① 잠재적인 정책대상 규모의 성비와 실제 정책 수혜자 규모의 성비가 형평한가?

년도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매년 급속히 그 수가 증가하여 여성은 2003년 1,929명에서 2006년 현재 6,201명으로, 남성은 2003년 440명에서 2006년 1,514명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약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은 시범사업 기간이었다고 본다 해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2004년 대비 2006년 9월 실적을 봐도 여성과 남성 모두 약 2배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전체 참여자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인 정책대상규모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잠재적인 정책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자료에 따르면 경기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실업자, 여성,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주요 수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노동부, 2003). 2006년 시행지침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이라 함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직자

로 명시하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제공한 2005년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분석 결과⁴⁾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여성은 65.5%가, 남성은 62.2%가 사회적일자리 참여 전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여성의 비정규직 경험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업기간도 남성은 평균 21개월인데 반해 여성은 42개월로 거의 2배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나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5> 사회적일자리 참여 직전의 노동시장 내 지위

단위 : 명, %

			성별		Total
			남자	여자	
전직 형태	비정규 직	빈도	56	277	333
		전직형태	16.8%	83.2%	100.0%
		성별	62.2%	65.0%	64.5%
	정규직	빈도	34	149	183
		전직형태	18.6%	81.4%	100.0%
		성별	37.8%	35.0%	35.5%
Total		빈도	90	426	516
		전직형태	17.4%	82.6%	100.0%
		성별	100.0%	100.0%	100.0%

<표 III-26> 사회적일자리 참여 직전의 실업 기간

성별	남자	여자
평균	21개월	42개월

실업극복국민재단의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경험이 있고, 상당기간의 실업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기는 하나 잠재적인 정책대상 규모의 성비와 실제 정책 수혜자 규모의 성비가 형평한가를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자에 대한 통계청(2006)의 자료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결

4)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는 2005년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본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를 성별통계 중심으로 재분석해서 제공하였다. 분석대상은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실태조사 조사대상 중 여성 558명, 남성 111명에 해당한다.

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2006) 자료에 의하면 여성실업자는 272,000명, 남성실업자는 494,000명였고, 여성비정규직은 4,363,000명, 남성비정규직은 4,083,000명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실업자의 성비는 여성 : 남성 = 35.5 : 64.5, 비정규직의 경우는 여성 : 남성 = 51.7 : 48.3으로 나타나서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의 성비인 여성 : 남성 = 80 : 20과 비교하면 실업자와 비정규직 내 여성 비율보다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예산 배분 결과의 성별 편차가 있는가?

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사회적일자리 사업 집행 결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 202억원, 2005년 285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배분 결과가 성별로 편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차 성별 참여자에게 배분된 예산 배분 결과 자료를 요청했으나 그러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결산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표 III-27> 사회적일자리 사업 집행 결산

단위 : 백만원

예산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국비 (일반회계)	2004	18,714	4,590	23,304	20,275
	2005	25,807	2,971	28,778	28,562

출처: 노동부 내부자료(2006).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중 여성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2006년 70만원으로 1인당 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별 간에 예산 배분 상 차이는 없지만,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제공받은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 참여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72만원, 여성은 69만원으로 사업유형에 따라 자체수익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28>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성별 월수입

단위 : 원

	평균 월수입 평균		비교(월수입의 중간값=정부단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급여(월)	693,907	722,870	670,000	670,000

기준 : 2005년 현재.

사회적일자리 참여인원수 대비 1인당 지급되는 인건비의 총액 자체만을 고려해서 사회적일자리 예산 배분결과가 성별로 편차가 있다-특히 여성참여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이 배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전체 사회적일자리 사업예산은 인건비 뿐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지원, 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배분의 성별 효과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후 국가재정법의 개정과 함께 디지털회계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성인지예산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성별, 사업유형별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 만족도의 성별 동등성

정책만족도는 사회적일자리의 근로시간, 급여수준, 계약기간 등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제공받은 사회적일자리 참여자 분석 결과에 나타난 성별 정책만족도를 보면, 먼저 자신의 기술수준 대비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높았는데, 여성 67.1%, 남성 59.7%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약기간에 대한 성별 만족도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도가 낮았다. 여성은 48%가, 남성은 35.7%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서 현행 1년단위로 계약되고 있는 계약기간 규정에 대해 여성의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급여에 대한 만족도 역시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도가 낮았는데, 여성은 55.8%가 남성은 56.7%가 현재 급여수준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과 남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52.4%가 남성은 65.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업무배치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56%, 남성 52.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 자신들이 배치된 업무에 대해 참여자의 1/2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 63.6%, 남성 64.1%로 참여자의 2/3가 현재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계약기간과 급여 수준에는 불만족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이나 자신의 기술수준 대비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배치나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기간에서는 여성(48%)가 남성(35.7%)보다 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에서는 여성(52.4%)보다 남성(65.1%)이, 업무배치에서는 여성(56%)보다 남성(59.2%)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결과의 양성평등성

①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었는가? 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소득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결과를 낳고 있는가?

여성참여자들에게 대안적 일자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안정성 보장하는데는 미흡하다. 여성참여자들은 일반노동시장보다 나은 일자리로 평가, 실무자들 역시 사회적일자리가 고졸의 중년 여성이 가사 등과 병행하기 용이, 사회적일자리=여성 위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계약기간의 불안정성, 시장진출 지향하는 사회적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지원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참여자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취업 지원서비스 총량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므로,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서비스 미흡하다.

일의 내용 대비 급여수준 만족도는 낮다고 평가되었고, 보조소득원인 경우의 여성참여자는 급여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생계 책임지는 소득원인 경우 소득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정책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돌봄 관련 일자리 중심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여성 다수 참여, 참여 여성들

도 자신들이 잘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케어복지, 장애아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교실 등을 여성대상 광역사업으로 명시하였다. 돌봄 관련 일자리의 경우 여성일/ 남성일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있어서 남성 신청 저조, 참여했다가도 중도 탈락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돌봄노동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는 사회적 시선 내재화가 있다.

8-2)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정책

(1)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잠재적인 정책대상규모의 성비와 실제 정책 수혜자 규모의 성비가 형평한가?

정책 수혜자 규모의 양성평등성은 잠재적인 정책 대상 규모의 성비와 실제 정책 수혜자 규모의 성비가 형평한가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잠재적인 정책 대상 규모는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체 노인인구 중 여성 인구 비율은 약 60%이고, 65~74세 전기노인인구는 56.3%, 75~84세 중기노인인구는 56.3%, 85세 이상 후기 노인인구는 75%가 여성이다. 후기 노인 인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일자리 참여가 불가능하다 해도, 전기, 중기 노인인구의 잠재적인 여성 일자리 사업 대상자들은 전체 노인인구의 6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 수혜자 규모를 살펴보면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비율이 거의 1:1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9> 2005~2006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성별 규모

단위: 명, %

구 분			2005년			2006년 9월 현재		
			참여인원	남성비율	여성비율	참여인원	남성비율	여성비율
총 계			47,309	48	52	85,947	49	51
노 인 일 자 리	공익형		31,101(65.7)	54	46	51,402(59.8)	51	49
	교육 복지형	교육형	7,063(14.9)	58	42	8,387(9.8)	60	40
		복지형	4,581(9.7)	26	74	17,996(20.9)	31	69
	자립 지원형	인력파견형	931(2.0)	63	37	1,271(1.5)	62	38
		시장형	3,633(7.7)	41	59	6,891(8.0)	40	6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남성 비율이 48%, 여성비율이 52%로 나타났고, 2006년 9월 현재 남성비율은 49%, 여성비율은 51%로 나타난다.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38,638명(81.6%) 증가했고, 남성 노인은 19,406명(85%), 여성 노인은 19,232명(78%) 증가했다.

유형별로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공익형은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에 비해 조금 높다. 2005년에는 공익형의 남성 비율이 54% 였는데, 2006년 9월 현재 51%로 3%p 감소하였다. 교육형은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에 비해 훨씬 높다. 교육형은 숲생태해설, 문화재해설, 교육강사(전통문화, 1-3세대연계), 건강관리 등의 강의·해설 업종으로 교육 수준과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다. 남성 노인은 여성 노인에 비해 학력이나 경력이 높아 남성 노인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복지형은 여성 노인 참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복지형 사업은 독거노인, 중증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돌봄과 老-老 케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정에서도 '돌봄'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던 여성 노인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력파견형은 남성 참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인력이 대부분 공원관리원, 청사관리원, 주유원, 식당보조원, 매표원 등으로 특히 공원관리나 건물관리, 주유원의 경우 남성 노인의 참여율이 높아 인

인력파견형에서는 여성 노인 참여율이 낮다. 인력파견형의 경우 참여 노인의 임금은 수요처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정부는 부대경비만 지원한다. 인력파견형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다른 일자리사업 유형에 비해 많아서 노인들의 참여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으나 인력파견형이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성 노인 참여 비율은 더욱 낮아, 노인 인력 파견 특히 여성 노인 인력 파견을 위한 일자리 개발이 요구된다. 시장형은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에 비해 높다. 시장형은 주로 간병인 사업단, 지하철택배사업단, 세탁방, 공동작업수행 등인데, 공동작업수행에는 농산물가공업, 김치공장 등이 많고, 간병사업단, 세탁방 등 지하철택배를 제외하고는 주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예산 배분 결과가 성별로 편차가 있는가?

노인일자리사업의 1인당 지원금은 성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자리 유형별 지원금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그 결과 지원금이 낮은 유형에 여성노인 비율이 높은 경우 여성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월 20만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는 지원금이 배정되지 않는다. 공익형과 인력파견형은 교육 및 부대비용으로 연 10만원을 제공하고, 교육형, 복지형은 연 15만원을 지급한다. 시장형은 월 20만원을 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제공하되 연 11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III-30> 사업 유형별 예산 지원 기준

구분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구성비율(%)	국고보조율
		인건비(월)	참여개월	교육및부대 비용	계		
공익형		20만원이내	7개월이내	10만원이내	150만원이내	55%이내	서울:30% 지방:50%
교육복지 형	교육형	20만원이내	7개월이내	15만원이내	155만원이내	30%이상	
	복지형	20만원이내	7개월이내	15만원이내	155만원이내		
자립지원 형	시장형	20만원이내 (인건비 또는 사업비)	-	-	115만원이내	15%이상	
	인력파견 형	-	-	-	10만원이내		

자료: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위 표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의 지원금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의 경우 남성 노인이나 여성 노인이나 공통적으로 20만원의 임금과 10만원~15만원의 교육 및 부대비용을 받는다. 그런데 교육시간에서 교육 및 부대비용이 10만원인 공익형은 소양교육 4시간, 직무교육 4시간 이상으로 제일 짧고, 교육 및 부대비용이 15만원인 교육형은 소양교육 4시간, 직무교육 20시간 이상(숲생태해설·문화재해설사업은 90시간)으로 가장 길며, 복지형은 소양교육 4시간, 직무교육 8시간 이상이다.

교육시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특히 숲생태해설·문화재해설사업의 경우 교육시간이 길어서 이 기간이 지나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생계 때문에 인적 자본이 적은 여성 노인에게는 교육 기간 동안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교육형 사업 참여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형의 경우 다른 유형의 사업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높다. 공익형과 복지형은 근무시간이 하루 3~4시간, 주 3~4일 근무시 월 20만원을 받는 반면, 교육형은 주당 평균 5시간 월 총 20시간 이내로 근무하여 월 20만원을 받아 시간당 임금은 교육형이 더 높다. 공익형과 복지형은 시간당 임금이 최대 5,555원 정도이고, 교육형은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이다. 여성 노인의 경우 인적자본(교육수준과 노동시장경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육형 참여가 어렵다면, 이는 시간당 임금이 높은 유형의 사업에 여성노인이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지형에 비해 시간당 임금이 높다는 것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저평가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지침에 나타난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지원 유형별 구성비율에서 공익형을 55% 이내, 교육복지형을 30% 이상, 자립지원형을 15%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공익형에 65%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복지형에 28%(교육형 11.2%, 복지형 16.9%), 자립지원형에 5%(인력파견형 0.7%, 시장형 4.2%) 정도의 예산이 배분되어 있다. 반면 참여자 비율은 공익형이 59.8%, 교육형이 9.8%로 예산 비율에 비해 참여자 비율이 작고, 복지형 20.9%, 인력파견형 1.5%, 시장형 8.0%로 예산 비율에 비해 참여자 비율이 크다.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자가 많은 유형인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은 사업비용 등이 충분치 않을 것이고, 이 유형에 속해 있는 노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복지형과 시장형의 경우 여성 노인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과 참여자 수의 불균형이 여성 노인의 사업 비용, 교육 내용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리 유형별·성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I-31> 2006년 예산 배분 현황과 참여자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		노인일자 리박람회	총계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예산배분비율	65.1	11.2	16.9	0.7	4.2	2.0	100
참여자비율	59.8	9.8	20.9	1.5	8.0	-	100

- ③ 정책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정책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경우 어느 정도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2%에 이르고 남성의 경우 74.8%에 이른다. 대체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남성 노인은 5.8%, 여성 노인은 3.9%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 비교를 해 보면, 남성의 경우 '매우 도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5%이고 여성의 경우 52.2%였던 데 반해 '대체로 도

움 안된다'고 응답한 남성은 61.2%, 여성은 38.8%, '전혀 도움 안된다'고 응답한 남성은 62.7%, 여성은 37.3%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의 경제적 효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 노인의 경우 이전 혹은 현재의 경제활동에서 기대하는 소득이 여성 노인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32> 경제적 효과 만족도의 성별 비교

단위: 명, %

		성별		Total
		남자	여자	
매우도움됨	빈도	3,972	4,391	8363
	사업의 경제적 효과	47.5%	52.5%	100.0%
	성별	43.4%	52.2%	47.6%
대체로 도움됨	빈도	2,875	2,538	5413
	사업의 경제적 효과	53.1%	46.9%	100.0%
	성별	31.4%	30.2%	30.8%
보통	빈도	1,770	1,158	2928
	사업의 경제적 효과	60.5%	39.5%	100.0%
	성별	19.4%	13.8%	16.7%
대체로 도움안됨	빈도	426	270	696
	사업의 경제적 효과	61.2%	38.8%	100.0%
	성별	4.7%	3.2%	4.0%
전혀 도움안됨	빈도	99	59	158
	사업의 경제적 효과	62.7%	37.3%	100.0%
	성별	1.1%	.7%	.9%
Total	빈도	9,142	8,416	17558
	사업의 경제적 효과	52.1%	47.9%	100.0%
	성별	100.0%	100.0%	100.0%

(2)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여성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었는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이 안정되었다고 느끼는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은가? 이러한 연관고리를 깨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있는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임금 적절성과 고용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 남녀 노인 모두에게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것보다는 임금 적

절성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임금 적절성의 경우 여성의 높은 임금에의 욕구가 더욱 컸으며(여성 노인의 77.4%, 남성 노인의 70.9%가 현재보다 많은 임금을 원함),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욕구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비슷하다(남성 노인의 40.1%, 여성 노인의 42.9%가 11~12개월 참여를 원함).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전통적 성역할 업종인 가사도우미, 복지도우미, 급식 보조 등의 여성 참여율이 높다.(여성 참여 비율-가사도우미 91.9%, 복지도우미 63.2%, 급식보조 91.0%)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지 못하는 업종 배치에 대해 노인의 경력과 수요자의 요구상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필요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여성 노인과 남성 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

9)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사업

(1)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①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인력 및 연구투자액 배분은 성 평등한가?

가. 연구책임자 현황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여성 연구책임자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1년 15.6%(340명)에서 2005년 19.4%(954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평균 비율은 17.5%이다.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17.5%는 2004년도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인력 중 박사급 여성 비율 18.7%와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하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III-33>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성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2005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여자	340	15.6	435	16.5	538	17.0	578	17.5	954	19.4	2,845	17.5
남자	1,843	84.4	2,207	83.5	2,634	83.0	2,732	82.5	3,952	80.6	13,368	82.5
전체	2,183	100.0	2,642	100.0	3,172	100.0	3,310	100.0	4,906	100.0	16,213	100.0

주) 해당연도에 중복참여한 연구 책임자는 1명으로 계산됨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DB

나. 연구투자액 현황

최근 5년간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연구투자액 중 여성 연구개발인력에 배분된 투자액 비율은 평균 10.3%이다.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투자액은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나 여성 연구개발인력에게 배분된 비용은 '01년 9.4%에서 '03년 11.5%, '05년 9.6%로 거의 증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10% 내외에 머물고 있다. 2005년도의 경우 생명공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10,967억원은 전체 정부 연구개발 투자액의 15.2%에 해당된다. 그 중 다시 여성 연구책임자에 투자된 비용은 1,051억원으로 생명공학분야 전체 연구투자액의 9.6%이다.

연구책임자와 연구투자액의 성별 현황을 함께 고려해볼 때,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 연구책임자에 돌아간 연구투자액 비중은 10%선에서 별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 연구책임자들이 남성 연구책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 규모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거나 혹은 대형 투자 규모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중 여성의 비중이 작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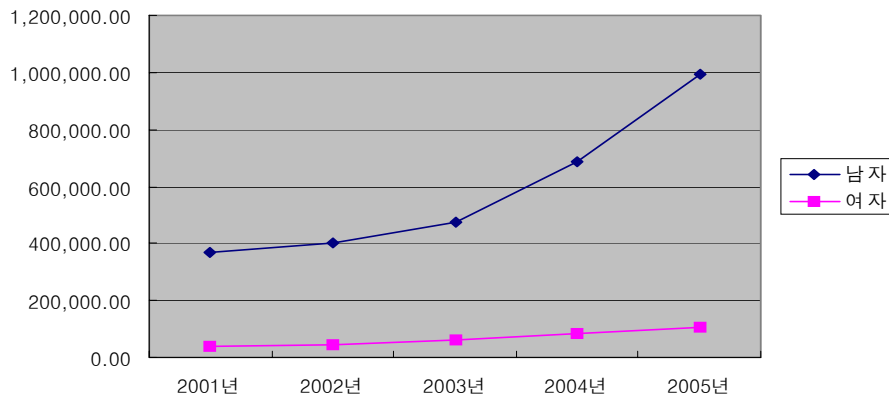
<표 III-34>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

성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2005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여성	38,493	9.4	47,192	10.5	61,731	11.5	82,443	10.7	105,146	9.6	335,005	10.3
남성	368,980	90.6	404,288	89.5	473,839	88.5	689,236	89.3	991,602	90.4	2,927,945	89.7
전체	407,473	100.0	451,480	100.0	535,570	100.0	771,679	100.0	1,096,748	100.0	3,262,950	100.0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DB

[그림 III-3]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별 투자 추이 성별 비교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DB

다. 과제수 현황

과제별 현황 분석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를 기준으로 성별 분석을 시도하고 과제수와 연구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녀 연구자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를 산출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남녀 연구책임자들이 수행한 과제수는 남녀 모두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05년도에 남녀 모두 큰 증가를 보였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 규모는 남성의 경우 2001년 140.1백만원에서 2005년 184.6만원으로 31.8% 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2001년 83.3백만원에서 2005년 88.1백만원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남성 184.6백만원, 여성 88.1백만원으로 남성 연구자의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여성 연구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5>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당 평균연구비 성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성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1-2005	
	과제 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과제 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과제 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과제 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과제 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과제수	과제당 평균 연구비
여성	462 (14.9)	83.3	595 (16.4)	79.3	725 (16.8)	85.1	777 (17.7)	106.1	1,194 (18.2)	88.1	3,753 (17.1)	441.9
남성	2,634 (85.1)	140.1	3,029 (83.6)	133.5	3,591 (83.2)	132.0	3,621 (82.3)	190.3	5,373 (81.8)	184.6	18,248 (82.9)	780.5
전체	3,096	131.6	3,624	124.6	4,316	124.1	4,398	175.5	6,567	167	22,001	722.8

②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 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남녀 연구책임자들에게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58.3%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대체로 만족한다'가 다음으로 많은 35.9%를 차지하였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9%)와 '매우 만족한다'(0.9%)는 응답은 극히 적었다. 성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을 합한 비율)'는 응답은 여성(32.3%)보다 남성(43.3%)에서 더 높았고,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을 합한 비율)'는 남성(56.6%)보다 여성(67.7%) 연구자에서 더 높았다.

<표 III-36> 생명공학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남	여	전체
매우 만족한다	2(2.2)	-	2(0.9)
대체로 만족한다	37(41.1)	43(32.3)	80(35.9)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7(52.2)	83(62.4)	130(58.3)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4.4)	7(5.3)	11(4.9)
계	90(100.0)	133(100.0)	223(100.0)

이를 연속변수화하여 남녀 연구자의 정책 만족도의 평균을 산출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4점 만점 척도에서 남 2.41점, 여 2.27점으로 남성 연구자의 정책 만족도가 약간 더 높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37> 생명공학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차이 검증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p
남	2.41	.616	1.740	177	.084
여	2.27	.552			

*** $p < .001$, ** $p < .01$, * $p < .05$

(2) 사업영향의 양성평등성

- ① 제1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집행 결과는 과학기술분야(생명공학분야) 성 평등의 진전을 위해 기여하였는가?

가. 인력 양성 측면

우선 인력 양성의 측면에서 생명공학분야와 정보통신분야의 성별 실태를 비교해보았다. 학위별 졸업자 및 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5년도 현재 생명공학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은 학사 55.3%, 석사 43.1%, 박사 25.8%이며 정보통신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은 학사 24.5%, 석사 13.5%, 박사 10.0%로 나타났다. 생명공학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은 학사 인력에서 약 2배, 석박사급 고급인력에서 약 3배 정도 정보통신분야의 여성 인력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T와 IT라는 두 첨단 기술 분야를 비교하였을 때, 두 분야 모두 고급인력으로 갈수록 성별 불균형이 더 심한 것은 공통적이거나 인력 양성 총량 측면에서는 BT 분야의 여성 인력의 양성 규모가 훨씬 크다. 즉, 생명공학 분야는 학사 인력의 양성에서는 성별 균형을 이미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인력 양성 규모에서 다른 첨단 기술 분야보다 선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8> IT/BT 분야 졸업자 수 및 여성비율

단위: 명, %

	IT ⁵⁾			BT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전체졸업자수	79,882	11,656	1,748	30,652	7,028	2,654
여성졸업자수	19,540	1,572	174	16,963	3,030	684
여성 비율	24.5	13.5	10.0	55.3	43.1	25.8

나. 인력 활용 측면

연구개발인력 중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과학기술연구개발인력의 평균 여성 비율은 12.0%(박사급 11.6%, 석사급 13.7%, 학사급 10.8%)이며 생명공학분야 중 연구개발인력 비율은 24.4%(박사급 18.7%, 석사급 31.3%, 학사급 34.1%)이다(과학기술부, 2005b). 이러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생명공학분야의 여성 연구개발인력 비율(24.4%)이 전체 연구개발인력 중 여성 비율(12.0%)보다 2배 정도 높다. 둘째, 전체 연구개발인력에서는 학위 수준에 따라 여성 인력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생명공학분야 연구개발인력은 박사급의 고급 여성 인력의 비중이 석사 및 학사 중 여성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 즉, 생명공학분야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여성 참여가 높은 편이나 학사나 석사보다 박사급 고급 인력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인력 중 여성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 시스템DB의 6T분류 기준에 따라 BT, IT, NT분야의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투자액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율은 BT 분야와 타 분야간 큰 격차를 보인다. BT분야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01년 15.6%에서 2005년 19.4%로 증가하였고 5년 평균 17.5%를 나타낸다. IT 분야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01년 2.8%에서 2005년 3.5%로 0.7%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고 5년 평균 비율은 3.8%

5) IT분야 대학진공계열: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반도체·세라믹공학, 전기공학, 제어계측공학의 7개 소계열

를 나타냈다. NT 분야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2001년 3.6%에서 2005년 5.4%로 1.8% 포인트 높아지고 5년 평균 비율은 5.0%를 나타내 IT 보다는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이 약간 높은 증가를 보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투자액 중 여성 수혜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투자액 중 여성 수혜 비율 역시 BT 분야가 현저히 높았으며 IT와 NT 분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BT 분야의 여성 연구책임자에 배분된 연구투자액은 2001년 9.4%에서 2005년 9.6%로 거의 증가되지 않았으나 5년 평균 10.3%로 IT 분야 5년 평균 비율 2.2%, NT 5년 평균 비율 2.1%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IT 분야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에게 배분된 연구투자액은 2001년 1.1%에서 2005년 2.9%로 자체 증가율은 높았으나 아직 3%가 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NT 분야에서 여성 연구책임자에게 돌아간 연구투자액 비율은 2002년 1.7%에서 2005년 2.1%로 5년 동안 1.4% 그치는데 그쳐 BT와 IT 보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이공계 분야 중 생명공학분야는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규모면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 규모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인력 및 투자액 규모 등 활용 측면에서도 IT나 NT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앞서 있다. 이러한 선도적 위치는 생명공학분야가 과기분야 여성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있어 모범 사례를 구축해야할 책임 또한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떨어지는 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비율과 연구투자액 규모의 괴리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V.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본 장에서는 성별영향평가의 자체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사업 담당부처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사업 유형별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안을 제시한다. 성과지표 안은 성과지표의 정답으로서가 아니라 예시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사업 유형의 사업이라도, 사업의 범위와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성과지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사업유형 분류

	사업수단	개념 및 사업유형
1	공적부조·기타연금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 대한 급부 제공.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법정보상 및 보조금과 구분 ▪ 복지부 : 경로연금,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2	검사·조사·인증	검사, 조사, 인증이 주된 활동인 사업 ▪ 농림부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산자부 : 기계류 품질 인증
3	교육·훈련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 교육부 : 교육방송인터넷 강의 ▪ 정통부 : 국민정보화교육사업
4	구조개선	기관 및 사업체의 통폐합 및 이전 ▪ 농림부 : 영농규모화, 과원폐원지원
5	기관운영 지원	경상경비 보조 또는 경영개선을 위한 기관운영 지원 ▪ 국방부 : 전쟁기념사업회 운영 ▪ 해수부 : 수협경영지원
6	기술·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 ▪ 농진청 : 새기술보급사업
7	대민서비스 제공	정부의 민원 상담 서비스 등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 ▪ 조달청 : 정부조달 콜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부 :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
8	대외교류 · 협력	<p>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이해제고, 해외 현지기반 조성, 통상이익을 위한 초석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교부 : 자유무역협정추진, WTO 분쟁대응
9	대위변제	<p>신용보증의 공급 및 대위변제금의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 : 신용보증 대위변제
10	자원유지보전 (문화재 포함)	<p>자원 · 문화재의 유지 · 보수 · 보전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 경복궁 종합정비 산림청 : 산림자원보전관리
11	방지 · 예방 · 단속사업	<p>방지 · 예방 · 단속 활동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사업, 병해충방제사업 복지부 : 국가예방접종사업
12	보상금 · 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p>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 보조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 농림부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13	산업육성	<p>특정 산업의 육성이 목적인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통부 : DB 산업육성 지원 문광부 : 게임, 애니메이션, 출판 산업육성
14	시설확충 · 개선	<p>시설 및 건물, 건축물의 설비 확충 및 개선을 사업의 수단으로 활용(토지매입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자부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환경부 :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15	유통	<p>유통 및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부 : 축산물판매시설현대화 해수부 :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16	인력운영	<p>국가대표선수 · 군인 · 경찰 등의 인력 운영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광부 : 국가대표선수 양성 외교부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17	구매사업	<p>장비, 공구, 기구, 도서, 미술품 등 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 대기측정장비 확충 문광부 : 도서관 자료 확충
18	정보화 · 전산화시스템 구축	<p>정보통신기술 및 장비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 : 중대 PC방, 메가센터 구축 산자부 :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19	정책연구용역 · 연구사업	<p>연구개발 및 정책연구 사업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용역비” 해당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 : 한민족생활문화 연구

20	종합사업	하나의 사업목적하에 다양한 형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행자부 : 오지·도서·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21	통계정보제공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이 목적인 사업 ▪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 광업및제조업 통계조사
22	행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 국내외 문화 및 예술 공연,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 ▪ 보훈처 : 호국보훈기념행사
23	행정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등을 수단으로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 국세청 : 압류재산공매사업
24	홍보·방송	사업의 활동수단(activity)이 특정사업에 대한 홍보, 정책에 대한 홍보사업 또는 방송사업 ▪ 문광부 : 문화예술 홍보 및 교류 ▪ 방송위 : 교육방송, 국악방송 지원
25	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토목 공사 ▪ 건교부 : 화북담건설, 울진공항건설 ▪ 행자부 : 분양주택 건설
26	기타	비예산 사업, 정책 사업

2. 자체평가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1) 현황분석

아래 표는 2007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적어도 3개 이상의 사업이 나타난 유형을 중심으로 사업 유형별 평균 점수를 도출해 본 것이다. 우수한 사업은 1점, 보통인 사업은 0점, 미흡한 사업은 -1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도출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사업유형은 교육 훈련, 기관운영지원, 기술경영컨설팅, 대민서비스 제공, 방지 예방 단속, 보상금 및 보조금 지급, 산업육성, 인력운영, 종합사업, 그리고 기타 비예산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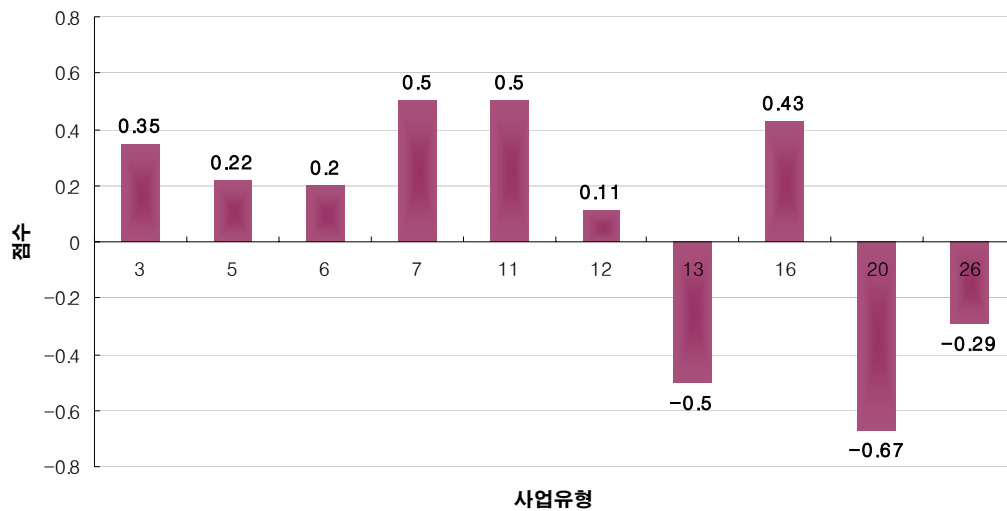
<사업유형별 평균점수>

사업수단	성별 통계 산출	정책 성별 관련 파악	정책 결정 과정의 양성 평등성	예산 편성의 양성 평등성		정책 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 평등성		정책 수혜의 양성 평등성				정책 영향의 양성 평등성	총점	사업수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인적 통계 작성 양식에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가	정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계획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정책의 자료,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 위원비율이 얼마인가	예산 편성 시 성별 인원 과 성별 정책 요구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따라 정책 서비스에 대한 성별 접근도가 다르지 않은가	홍보 방식에 따라 정책 서비스에 대한 성별 인지도가 다르지 않은가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수혜자와 만족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가	정책 집행 결과가 양성 평등과 여성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3	0.35	-0.38	0.82	-0.86	-0.71	0.6	0.8	0.17	0.44	0.2	0.33	0.62	2.38	17
5	0.22	0	0.71	-1	-0.71	0.57	0.29	0.25	0	-0.5	1	1	1.83	9
6	0.2	-0.2	0	-0.2	-0.2	0.8	0.8	0.4	0.4	0.8	0.6	0.6	4	5
7	0.5	0.33	0.33	-1	0	1	0.6	-1	-1	1	1	0.83	2.6	6
11	0.5	1	0.75	-1	0	1	1	1	1	0.5	.	1	6.75	4
12	0.11	-0.11	1	-1	-0.63	0.88	1	1	1	1	.	0.57	4.82	9
13	-0.5	-0.75	0	-0.75	0	0	0.25	-0.33	0.67	0.67	1	0.75	1	4
16	0.43	-0.14	-0.14	-1	-0.7	0.83	0.8	0.4	0.75	0.33	1	0.5	3.09	7
20	-0.67	0	0.22	-0.78	-1	0	0.11	0	1	0.2	0	0.14	-0.77	9
26	-0.29	0.14	0.5	.	.	1	1	1	.	0	1	1	5.37	8

※ 해당 사업수단에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3개 이하인 사업수단은 제외함

(1) 성별통계 생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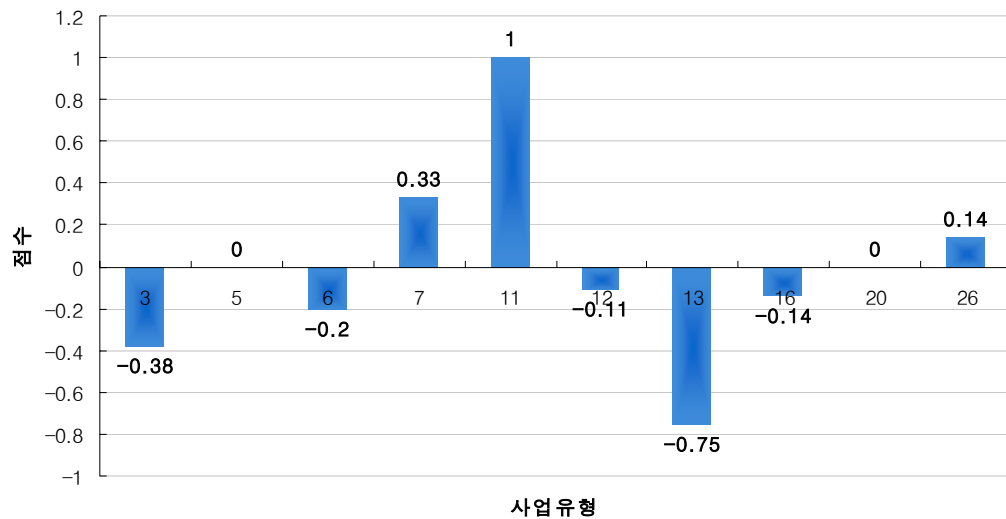
○ 관련법령 및 지침의 인적 통계 작성 양식에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가



성별영향 평가의 기본이 되는 성별 통계에 관한 평가 항목을 보면, 산업육성과 종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점수가 낮다. 그 이유는 사업 대상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를 성별로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실제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이나 보조금 사업은 양의 평균 점수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업 유형에 비해 점수가 높지는 않다. 이는 사업 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른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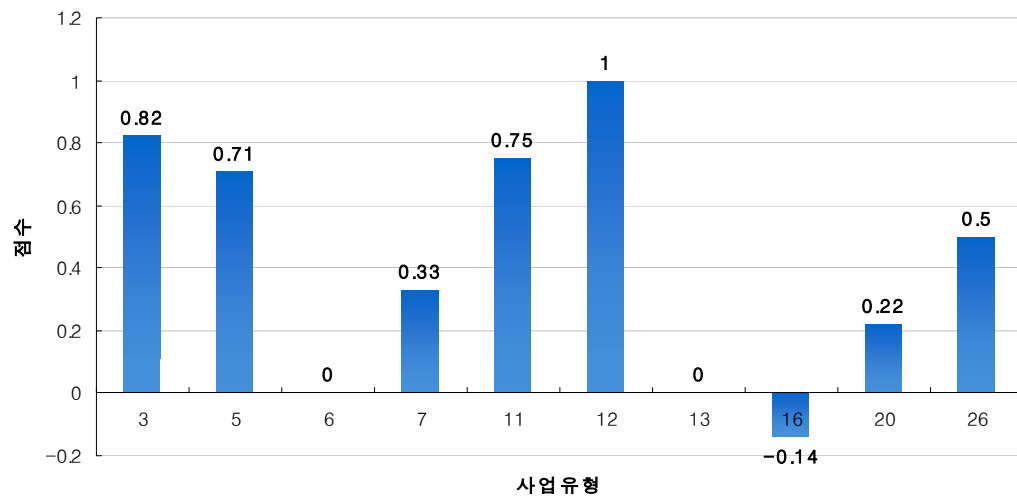
- 정책과 관련한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기획안에 반영하고 있는가



성별 수요의 차이를 파악하고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은 가운데, 유독 대민 서비스와 방지 예방 단속 사업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사업의 유형별 특성의 차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업 담당자나 부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다만 대민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대상이 구체적인 개인이고 성별 파악이 용이한 특성이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3)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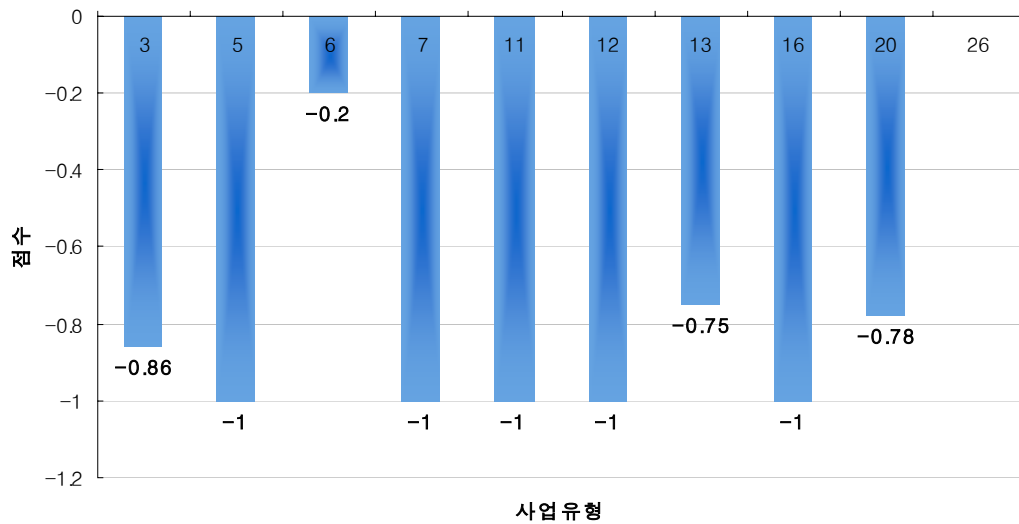
○ 정책의 자문, 심의, 의결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성별 위원비율이 얼마인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성별 참여 비율은 대체로 양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유독 인력 운영사업의 경우만 음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평가 항목이 사업 유형별 특성이 반영될 여지는 작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사업 담당자나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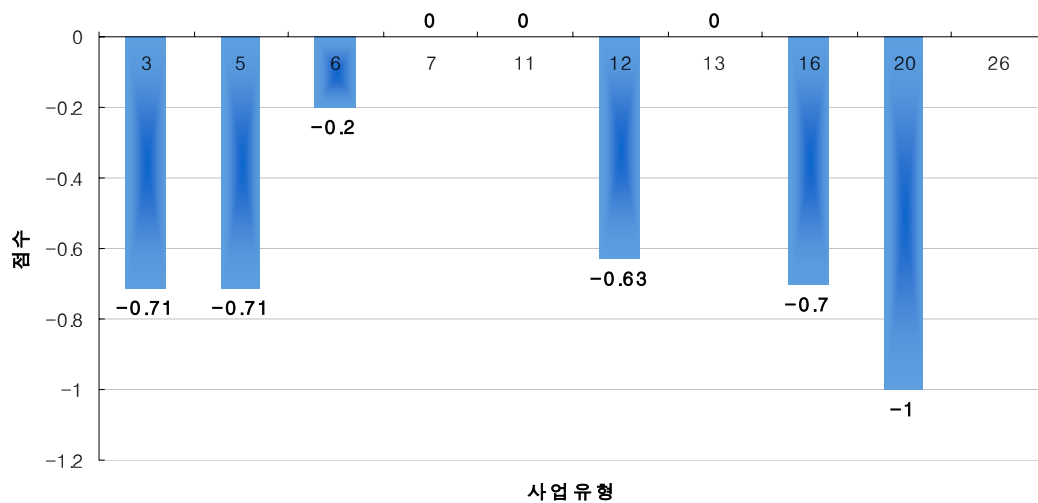
(4) 예산 편성의 양성평등성

(4-1) 예산 편성시 성별인원과 성별정책요구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예산 편성의 양성 평등성에 대한 항목으로서,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음의 점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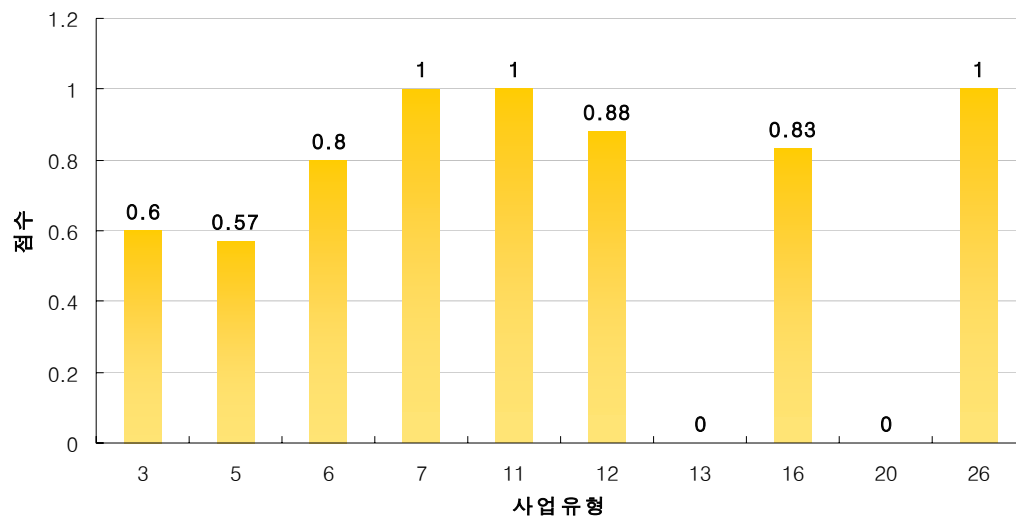
(4-2) 수혜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수혜도가 낮은 집단을 고려한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도 역시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음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업대상 선정 기준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닌 사업 유형에서 더욱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라고 판단된다.

(5) 정책서비스 전달 방식의 양성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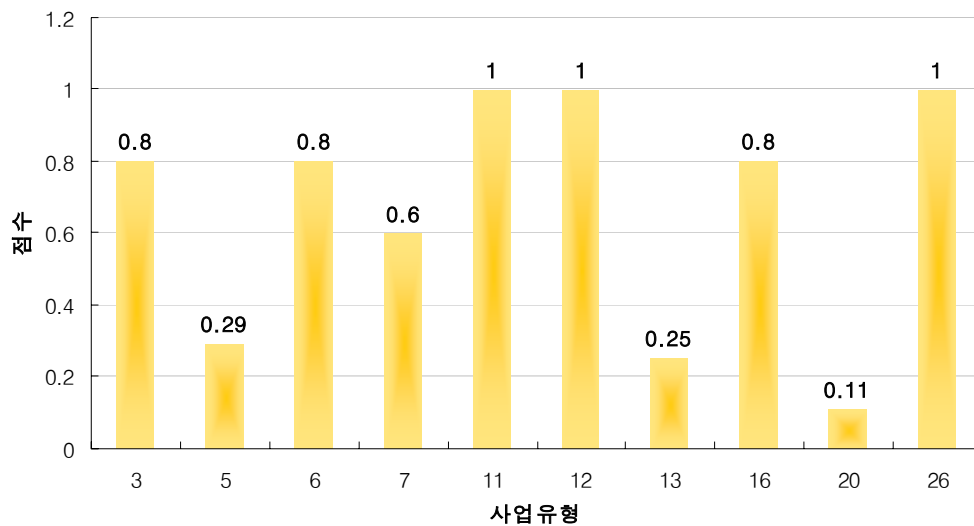
○ 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성별 접근도가 다르지 않은가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양호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산업육성과 중합사업과 같이 사업 대상이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다.

(6) 정책 홍보 방식의 양성평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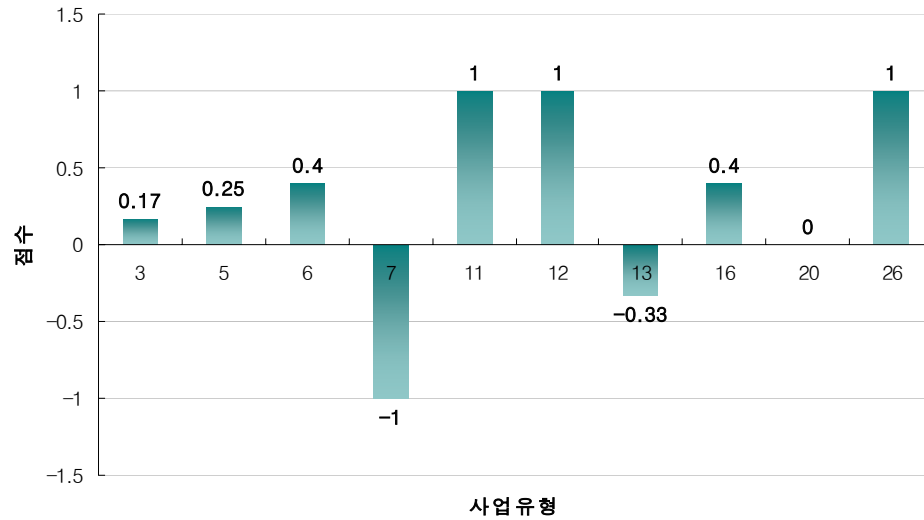
○ 홍보방식에 따라 정책서비스에 대한 성별인지도가 다르지 않은가



홍보 방식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이 지원 대상이 아닌 종합사업, 산업육성 등의 유형이 점수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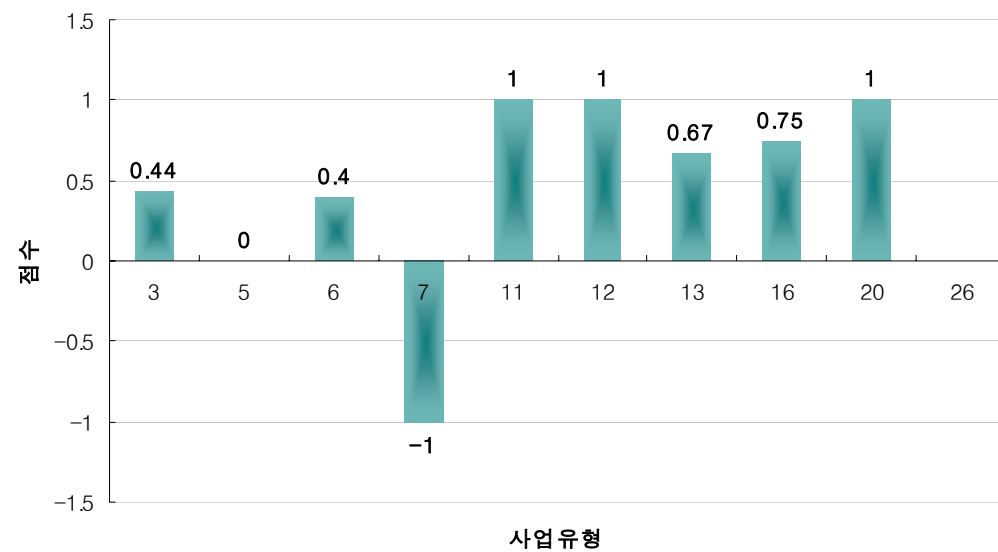
(7) 정책수혜(예산 배분 결과 포함)의 양성평등성

(7-1)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정책 수혜자의 성비에 대해서는, 대민 서비스가 유난히 점수가 낮다. 이는 실제 사업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는 역시 구체적 개인이나 집단이 지원 대상이 아닌 종합사업, 산업육성 등의 유형이 점수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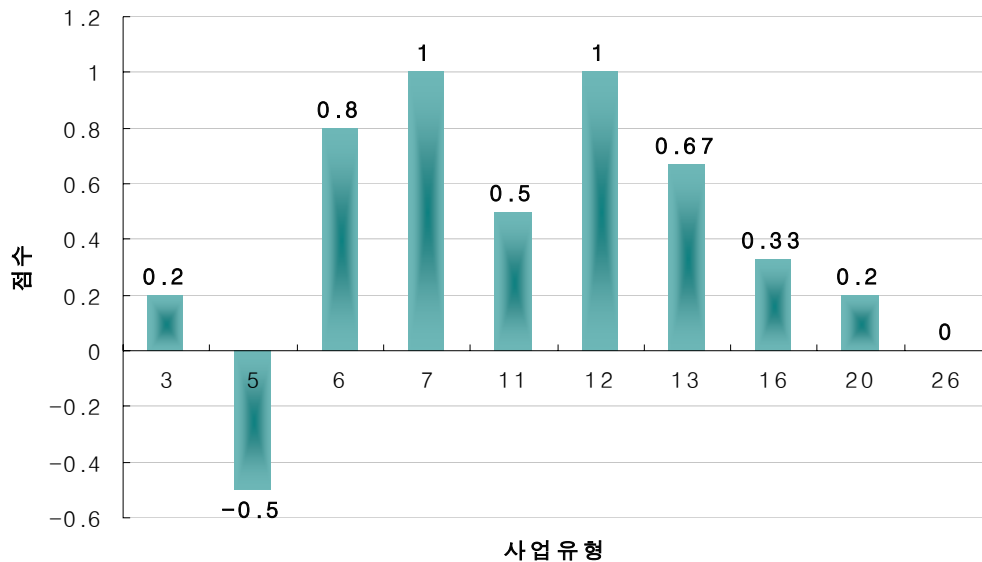
(7-2) 예산 지원금의 규모에서 성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가



지원 규모에 있어서의 성별 편차 여부는 대부분의 사업 유형이 양호한 점수를 받고 있다. 다만 대민 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업 유형상 평가가 곤란해서라기 보다는, 사업 상 실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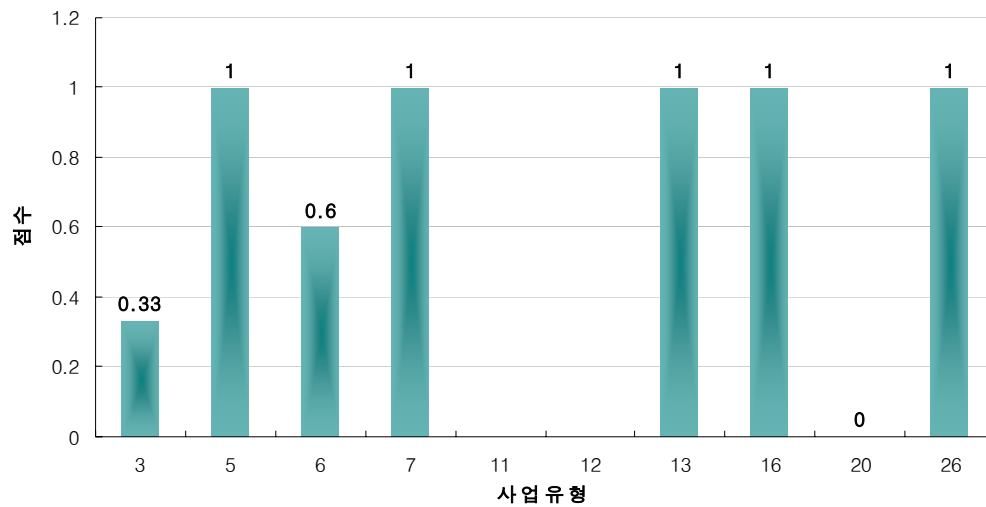
앞에서 논한 대로, 이 항목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

(7-3) 정책 만족도가 성별로 동등하게 나타나는가



정책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기관운영 지원의 경우만 음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종합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는 사업 유형에 따라 관리에 난이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개별 사업의 문제로 인해 점수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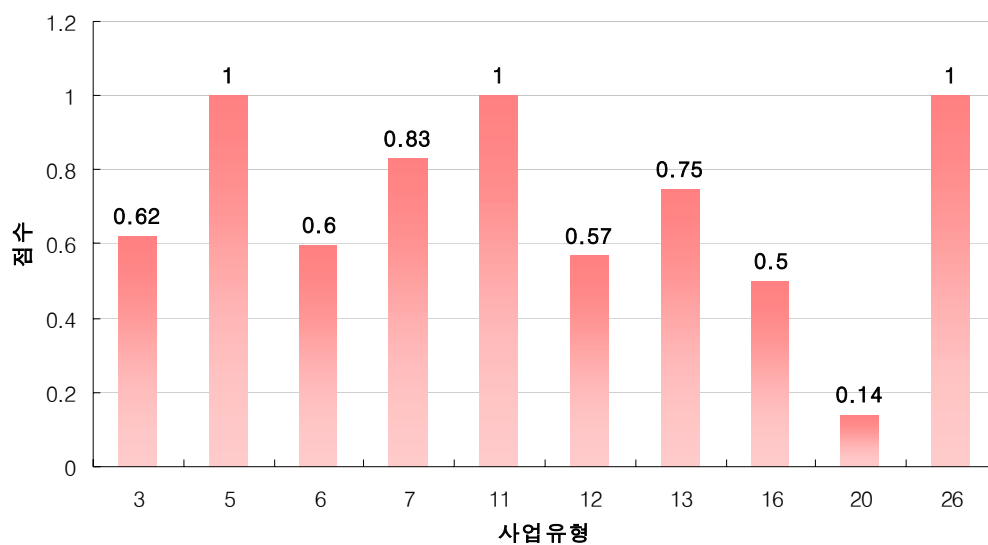
(7-4) 수혜자와 만족도에 있어 성별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는가



이전 평가 항목과 연계된 평가 항목으로 사업 유형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 하는 항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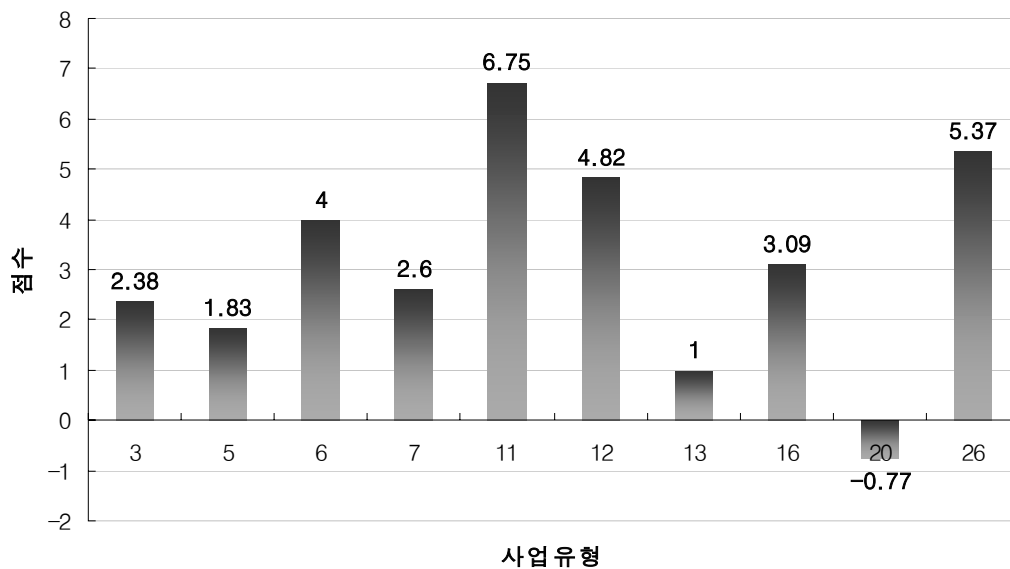
(8) 정책 영향의 양성 평등성

○ 정책집행 결과가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하는가



사업이나 정책의 양성평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서, 대체로 양호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종합사업의 경우만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각 사업 유형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이 평가 항목을 적용할 것인지가 향후 연구과제의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9) 총점



평가 총점을 보면, 대인적 성격이 약한 산업육성과 종합사업의 경우가 점수가 낮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유형별 해당사업 검토

(1) 공적부조 · 기타연금

가.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 사업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하고자 실시되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성별형평성

동 사업의 주 수혜자인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혜대상자 대비 수혜자 성별 비중 비교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비율(남: 여) - 1.9 : 1

무료진료 수혜자 비율(남: 여) - 1.7 : 1

따라서 정책 수혜 모집단의 남녀 성비가 1.9 : 1 을 차지하고, 수혜자 성비가 1.7:1 로 동 사업은 성별에 정책 수혜의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지표는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수혜대상자에 포함하여 모성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제도를 통한 의료혜택이 취약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특히 생활·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적 미취득 여성결혼이민자를 수혜대상자로 선정·지원하기도 하였다.

나. 재난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풍수해보험제도 운영

□ 사업목적

재난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여성정책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성별형평성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배분과 그에 따른 수혜실적을 성별로 구분한 실적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나, 수급세대 대부분은 부모·자녀세대를 구성하므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혜택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성별, 세대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혜자 성별을 고려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성인지적 분석에 부합할 것이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풍수해보험 사업의 특성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자의 능동적인 보험가입이 있을 후 성별이 파악되고 있다. 여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남성 수급자보다 빈곤율이 높고 재활 능력이 약하게 나타나는 사회전반적인 현상에 따라 여성에 대한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 사업은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검사·조사·인증

가. 만성병조사 감시사업

□ 사업목적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한 정책 개발 및 평가지원을 위한 국가 만성질환감시체계구축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손상의 크기 및 발생추세 파악, 사회 안전 평가와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생산 및 손상예방 안전 권고사항 제시를 위해 국가 통합 손상질환감시체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성별형평성

표본추출을 통한 조사사업으로 직접적인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성별에 가중치를 두어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손상 등 질병 발생에 있어 성별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사업의 결과로 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은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측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조사 결과 성별로 질병이나 손상 발생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를 손상예방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제시하고 손상정책 포럼 등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인지적 자외선 유해지수 연구사례 조사

□ 사업목적

자외선 지수는 태양고도가 최대인 남중시각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 영역의 복사량을 지수식으로 환산한 것이다. 0은 과다 노출 때 위험의 정도가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9이상은 과다 노출 때 위험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데, 기상청은 자외선 지수를 발표하고 국민들 스스로 자외선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피부암, 백내장 등의 질병에 대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성별형평성

자외선 지수를 조사하는 사업의 정책 수혜자는 전 국민이고 남녀에 따른 각각의 자외선 유해지수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수혜율에 있어 동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사업 결과로 정보제공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과지표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향후 성별로 자외선지수의 지표를 구분하여 발표한다면 서비스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간접적으로는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교육·훈련

가. 정책홍보 교육프로그램 사업

☐ 사업목적

홍보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홍보전문성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남녀간의 동등한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며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홍보전문성 교육대상자 모집시 성별로 모집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두

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형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성별비율을 고려한 수혜자 분석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홍보교육은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여성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여성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홍보전문성교육에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며 여성들의 참여확대가 양성평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목적

구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 취업과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성별 훈련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07년 9월 현재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여성비율이 28.6%로 모집단인 전체 장애인 중 여성비율 40.3%와 비교시 매우 낮은 편은 아니다. 보호자의 과잉보호 등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진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고시를 개정하여 훈련생 선발시 여성장애인 우대 및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 개발 등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 훈련기관 지원, 훈련기관 지정 및 승인취소 등 장애인 능력개발훈련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직업훈련지원협의회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결정에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구조개선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5) 기관운영 지원

가.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운영

□ 사업목적

청소년 대상의 상시적인 성문화 및 성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함양 및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정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실시현황에서의 수혜자 성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구 구입현황에서의 성별 편차를 비교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의 목표는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 평등적 성감수성 훈련으로 성인지적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간의 평등의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 제고에 있다. 그 결과 양성평등과 여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사업

☐ 사업목적

지역사회 구직희망 노인에게 취업상담·알선 등으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여가활용, 건강증진 및 보충적 소득 지원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현장에서 노인들의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원센터장은 전체 275명 중 남성이 153명(56%), 여성이 122명(44%)를 차지하고 있다. '07. 9월말까지 집행예산 4,622백만원 중 남성에게 2,588백만원, 여성에게 2,034백만원이 배분되었고, 취업알선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남성이 56%, 여성이 44%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는 수혜의 형평성을 센터장의 성별비율로 판단하고 있지만, 노인의 취업지원센터의 기관운영 지원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 취업지원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가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취업알선사업 담당자들은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이 저조한 여성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노인취업알선사업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여성 노인들이 정보접근이 용이하게 되면 여성 노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기술·경영컨설팅

가.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의 발달된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은 성별 지원대상 건수, 지원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에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지원대상 건수는 전체 1,100건 중 여성농업인 252건 23%이며, 지원예산은 44억원 중 10억원 23%로 나타났다. 남성·여성에 대한 개인당 지원금액은 동일하므로 1인당 평균지원금의 차이는 없지만, 지원대상 기준을 동일 적용시 여성농업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매출액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많은 여성 농업인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예산,홍보,서비스제공 등 모든 정책입안 및 집행시 차별요인을 우선 검토하는 등 고정관념 개선이 다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

☐ 사업목적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과학영농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농업인에 대한 영농현장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영농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새소득원 창출로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사업수혜자의 성비는 지역의 성별 농가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사업의 경우를 검토해 보면 2006년 기준 여성농가의 전국평균 비율은 약 17%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수혜대상자 가운데 최소한 17% 정도는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사업 수혜자 성비 형평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택, 이천, 용인, 원주, 철원, 홍천, 제천, 옥천, 영동 9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 운영실적과 병해충 예찰실 운영실적을 성별로 분리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의 여성 수혜농가 비율은 6.4%, 병해충진단실 운영의 여성 수혜농가 비율은 2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 따라 여성 수혜농가 비율도 차이가 크며, 토양검정실 운영과 병해충예찰실 운영의 수혜 성비도 크게 차이가 났다.

농업의 특성상 토양검정실 및 병해충예찰실 운영에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양검정실 운영의 여성 수혜농가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병해충예찰실 운영의 여성 수혜 농가는 적절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여성 수혜농가의 편차가 심하므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면서 성별 농가 비율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성별로 형평성 있게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농촌진흥청의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사업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전파하고 현장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여 종업인의 전문 능력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점차적으로 여성의 영농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는 확대될 것이며, 여성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계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농업인은 이전의 단순한 집안가사를 중심으로 농사일을 돕는 여성이 아니라, 직접 영농현장에 참여하여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 및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7) 대민서비스 제공

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 사업목적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용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의 발굴·지원하고, 지역별로 잠재수요가 충분하고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발적 진단 및 지역 내 협업 시스템 활성화로 사회서비스 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 확충을 도모한다. 지자체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분권화 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신청자·제공인력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보다 많은

정책적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지원대상 성별비율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동 사업의 경우 여성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대상의 대부분이 취학 전 아동이며, 만 15세 이하 여아 비중이 47%임을 감안 할 때, 여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계되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가족 내 여성의 책임으로 방치되어 온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일부 부담함과 아울러 그간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어온 중·노년기 여성 일자리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가정 내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양성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활성화 사업

□ 사업목적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분야 체험, 학습기능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동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 및 실업자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서비스증진사업을 위한 채용공고시 양성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들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서비스 증진이라는 정책목적과 정책수혜를 판단하는 성과지표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성별 수혜비율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대민서비스 증진 사업을 실시하면서 부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고 여성 특화된 사업에 여성 지원·고용 증가로 여성 근로기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8) 대외교류·협력

가.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사업

☐ 사업목적

개도국 여성의 인권 및 권익 향상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UN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에서는 선발된 연수생 성별 비율을 기준으로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연수생 선발시 특정 성별에 대한 선호나 차별을 금지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권고를 통해 양성평등이 고려되어 여성수혜자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연수참여를 통한 개도국 여성들의 의식전환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다. 연수에 참가한 개도국 여성지도자들은 선진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개발경험 등을 학습하여 자국의 여성인권현황 및 여성개발 문제 등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나. 한-베트남 미래지향적 교류사업

☐ 사업목적

한-베트남간 양국 여론 주도층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적 인식 심화를 위해 2001년부터 인적교류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은 성별을 따로 구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예산 편성 또한 양성평등성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정책 수혜의 양성평등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교류 인원의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결과를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 시행시 여성 문제 관련 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9) 대위변제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10) 자원유지보전(문화재 포함)

가.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 사업목적

5개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하천오염행위 감시·계도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5대강 수계에 대한 참여형 유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환경지킴이 모집에 남녀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업무수행에서도 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성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한 동 사업에서 환경지킴이 성별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시도별 환경지킴이의 여성비율은 19%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07년 환경지킴이 사업 운영결과, 일부지역의 경우 하천순찰 지역이 넓고 위험 구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여성의 참여비율이 19%로 어느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정책사업의 경우 여성의 참여율이 제고되어 양성평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1문화재 1지킴이 사업

☐ 사업목적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재 애호’의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선진 문화시민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국민참여 문화재보호 운동 확산 및 민간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정화,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화재감시 및 순찰, 문화재 및 시설물의 경상관리 분야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성별 지원 보조금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07년도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200백만원 중 순수하게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은 10백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5%가 여성단체에 교부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단체의 경우에도 여성이 참여하고 있어 위 결과를 두고 성별 형평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문화재 지킴이 참여 여성단체의 확산과 배려를 통하여 예산배분을 포함한 정책 수혜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전체 문화재 지킴이 2,513건 중 여성이 909건으로 36.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정책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 정책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1문화재1지킴이 정책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익이미지 제고를 접목하여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연 문화재청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1문화재 1지킴이 정책이 양성평등성에 대한 접근은 미미하였으나, 향후 정책결정 및 정책수혜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사한 정책에 있어 양성평등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방지·예방·단속사업

가.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

☐ 사업목적

에이즈 감염인 및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에이즈 감염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현재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준은 에이즈 감염 여부가 요건이며, 증상의 정도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염인은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별도의 성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수혜자(감염인 지원 대상자) 성별비율을 대상으로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에이즈 감염인 지원사업은 성별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하지는 않지만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국민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아 환자들이 많은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부에 대한 산전 검사 및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 여성을 위한 별도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HIV 감염 발생이 높은 남성 동성애자 등을 배려한 동성애자 전용 에이즈 검진 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일부 사업들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 정확성 제고사업

☐ 사업목적

국민소득 2만불시대 도래에 따라 급증할 여행자의 흐름 신속화를 위해 정보분석 정밀화를 통한 우범여행자 중점관리로 Invisible Customs를 구현함으로써 무역 원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APIS, PNR 제도에 의한 효율적 감시 체제 구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편리한 여행자 통관행정을 구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우범여행자의 선별 등을 포함한 해외여행자 통관 정책의 효과는 남녀노소는 물론 내외국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수혜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별도의 분석 없이 성별로 형평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보고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성별에 따른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X-ray 검색기, APIS 등 과학적 선별 기법을 통해 우범여행자 선별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구역의 칸막이화로 여행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였으며, 특히 검사과정에서 여성의 속옷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12) 보상금·보조금(인센티브 포함)

가.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 사업목적

과학기술 전분야(인접 인문사회과학분야 포함)의 창의성 높은 학제간 공동연구 또는 창의중심의 개인연구를 통하여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지원사업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성별지원금 수혜자 비율을 중심으로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시행계획은 전체의 12.9%(OECD'05)를 차지하는 여성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지원금 수혜비중 확대를 위해 현재 범부처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여성과학기술인 관련사업을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형평성을 넘어 우대적인 조치까지 지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여성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활발한 논문발표 및 특허출원 등으로 기초연구능력이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

□ 사업목적

관광사업체의 관광인력채용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지원하고 유능한 관광인력 발굴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관광분야를 전공한 인력 투입으로 고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 인턴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정부가 보조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관광계열 전공 졸업자 수와 청년인턴 채용사업 채용자 수의 남녀 성비를

비교하여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대략 졸업자 비율과 채용자 비율이 1:2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광학과와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채용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2006년 총 채용인원인 199명 중 정규직 전환인원은 135명(67.8%)이며 이 중 남녀 비율은 남 39명(29%), 여96명(71%)으로서 동 사업이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서비스가 상품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여성 인력의 수요가 높으므로 향후 관광사업체에게 관광산업 청년인턴 채용사업과 유사한 정책을 지원하여 채용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3) 산업육성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14) 시설확충·개선

가. 수용환경 개선사업

☐ 사업목적

남녀수용자간 불균형한 수용처우 개선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수용환경조성으로 여성수용자 인권신장 도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있다. 이를 위해 수세식 화변기를 좌변식 양변기로 교체하고 목욕실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남녀수용거실 대비 좌변식 양변기 설치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

절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으로 볼 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았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수용자를 고려할 때 성별 차별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수용자는 성에 의한 차별은 받지 않음으로 여성수용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나. 지구대 환경개선 사업

□ 사업목적

근무인원에 비해 협소·노후한 지구대를 확장 개축·리모델링하여 최일선 치안접점인 지구대 근무환경을 최대한 조기에 개선함으로써 공권력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품격 봉사치안의 기반 마련 및 지역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여경편의시설을 위한 예산배분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 기준으로볼 때, 현재 여경편의시설로 6%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여경의 비율 4.3%를 고려할 때 양성평등하다고 판단된다. 예산배분률이 여경의 비율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은 향후 여경의 비율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비율이라 볼 수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지구대는 최일선 민원접점 부서로 인원인의 방문이 빈번하나 기존 지구대는 여성전용 화장실 등 여성 편의시설이 미흡한 실정이었고, 지구대에 여경

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편의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근무시 불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편의시설 확충,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및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성별격차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향후 여경들이 지구대 근무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꺼려하지 않게 되어 근무지 선택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다.

(15) 유통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16) 인력운영

가. 홍보전문인력 인사관리사업

☐ 사업목적

홍보전문인력 인사관리사업은 채용, 승진 등 인사관리에 있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운용되도록 한다. 홍보분야는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성, 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국정홍보처 여성비율 대비 홍보전문인력 여성비율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된다. 국정홍보처의 여성비율은 29%이나, 홍보전문인력의 인사관리에 있어 채용 및 승진에 있어 30%를 상회함으로써 정책의 수혜자 성비가 정책 대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하다고 할 수 있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홍보전문인력 인사관리에 있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홍보전문인력의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인력은 30%를 상회한 것을 볼 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홍보전문인력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정상적으로 분포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

□ 사업목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IT인재육성을 위한 대학의 IT교육품질을 강화 및 IT 분야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0조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양성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신규 선정시 여자대학, 여성 교수·여성 참여 연구원이 포함된 신청과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정책 수혜대상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단계의 혜택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최종수혜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정보통신 인력양성 정책의 성별 불평등은 초래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가점 추진 등을 통해 최종 수혜자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성평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7) 구매사업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18) 정보화·전산화시스템 구축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19) 정책연구용역·연구사업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20) 종합사업

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 사업목적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을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공동체 형성 및 복원을 하기 위함이다.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조성, 기타 S/W관련분야 등을 조성지원한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동 사업은 자연부락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책 수혜대상에 있어 남녀 구분이 없으며 신청요건에 부합하면 어느 마을이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마을 운영단계에서 사무장 채용과 교육 등의 지원이 되고 있으나 성별 차별을 두지 않고 예산 등은 평등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사업은 직접적인 정책수혜의 성별 분리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성인지적 검토를 위하여 세부사업별로 성별 통계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수혜비율을 산출하여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마을단위 주민 공동사업으로 직접적인 양성평등 대상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영향의 파급효과로 교육을 통해 의식이 변화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 마을 체험운영을 통해 사업에서의 참여 역할이 늘고 농외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1) 통계정보제공

가. 문화재 통계

□ 사업목적

문화재 통계사업은 문화재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유관 기관·단체 등의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 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문화재 연감의 인적 통계의 경우 성별 구분 통계가 없어 문화재 정책에 대한 양성 간 수혜에 대한 비교가 곤란하나, 성별 구분 통계가 없어 상대적으로 그 수혜가 미흡한 여성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는데 있어 소홀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분리 가능한 문화재 통계에 대해서 문화재통계 성별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여성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2) 행사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23) 행정집행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24) 홍보·방송

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홍보사업

☐ 사업목적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및 활동 공적을 홍보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굴해 오던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굴 포상 및 홍보를 확대 강화하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 독립정신을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확립하고자 한다.

☐ 정책평가측면 분석

○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업무는 해당 유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성평등한 정책이라 자체평가 결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발굴포상 성별 비율, 홍보 대

상자 성별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책영향의 양성평등성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 구현에 힘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SOC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해당사업 없음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안

분류	사업수단	사업명	기존 성과지표	검토 결과
1	공적부조·기타연금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동 사업의 주 수혜자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혜대상자 대비 수혜자 성별 비중 비교	-
		재난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풍수해보험제도 운영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하므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 고려없음	보험 가입 과정에서 성별, 세대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수혜자 성별을 고려하는 지표 개발이 가능
2	검사·조사·인증	만성병조사 감시사업	성별 특성 반영하는 통계량 제시	결과지표 설정 어려움
		성인지적 자외선 연구사례조사(유해지수 지표개발)	성별 유해지수 제공	결과지표 설정 어려움
3	교육·훈련	정책홍보 교육프로그램	모집을 성별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자 성별비율을 고려

			형평하다고 봄	한 지표개발이 가능할 것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성별 훈련인원	-
4	구조개선	-	-	-
5	기관운영 지원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운영	기관운영비로 실시하는 교육 수혜자 성비 및 교구 구입 품목의 성별편차 존재여부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수혜의 형평성을 센터장의 성별비율로 판단함	노인지원취업결과의 성별비율을 고려할 수 있음
6	기술·경영컨설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성별 지원대상 건수, 지원예산	-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 병해충예찰실 운영으로 인한 성별 수혜농가비율	-
7	대민서비스 제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서비스지원 대상자 성별비율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활성화	서비스증진사업을 위한 채용공고시 양성평등원칙적용여부 검토	서비스제공받는 성별 수혜비율이 검토되어야 함
8	대외교류·협력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사업	선발된 연수생 성별비율	-
		한베트남 미래지향적 교류사업	-	교류인원 성별비율 고려 가능함
9	대위변제	-	-	-
10	자원유지보전 (문화재 포함)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환경지킴이 성별 참여 비율	-
		1문화재 1지킴이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단체대상 지원 성별보조금 비율	-
11	방지·예방·단속사업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	감염여부를 요건으로 하여 진료 지원하므로 별다른 성별 검토 없음	수혜자(감염된 지원대상자)들의 성별비율을 고려 가능함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관행정 정확성 제고사업	통관행정의 수혜자를 전국민으로 보고 별도의 성과지표 없음	-
12	보상금·보조금 (인센티브 포함)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성별 지원금 수혜비율	-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	졸업자 성별 비율과 채용자 성별 비율 비교	-
13	산업육성	-	-	-
14	시설확충·개선	수용환경 개선	남녀수용거실 대비 좌변식 양변기 설치비율	-
		지구대 환경개선	여경편의시설을 위한 예산배분률	-
15	유통	-	-	-
16	인력운영	홍보전문인력 인사관리	국정홍보처 여성비율 대비 홍보전문인력 여성비율	-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기획단계에서 양성평등 구현위해 여자대학, 여성 참여 포함된 신청과제에 가산점 부여	기획단계 비율이 아니라 최종수혜기관 비율 검토가 바람직함
17	구매사업	-	-	-
18	정보화·전산화시스템 구축	-	-	-
19	정책연구용역·연구사업	-	-	-
20	종합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부재하며, 세부사업 중에서 여성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계획	성별수혜비율 확인할 수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지표추가 가능함
21	통계정보제공	문화재통계	성별 수혜자 통계 부재함	문화재연감 성별 구분통계 비율
22	행사	-	-	-
23	행정집행	-	-	-
24	홍보·방송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및 홍보	국민들 모두에게 동등한 수혜가 이루어	발굴포상성별 비율, 홍보 대상자

			지는사업으로 보아 별도의 지표 없음	성별 비율고려가 능할 것임
25	SOC	-	-	-